

# ‘의문사 조기종결’ 연루 현직부장검사 소환불응

진상규명위, 강제동행 검토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의문사 관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부장검사를 소환했으나 이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 당사

자인 현직 검사를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1997년 발생한 운동권출신 김모(당시 27세) 씨 가족은 김씨의 사인이 실족사라는 검-경의 수사결과에 의문이 많다는 진정서를 작년 12월 제출했다. 진상규명위의 자체 조사결

과 이 사망사건이 당시 검-경의 조사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검찰의 조사가 이틀만에 조기 종결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지난달 초 두차례에 걸쳐 97년 당시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김씨 실족사건을 지휘했던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위원회측은 정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현-김종수기자 shon@sgt.co.kr

## 현직검사 첫 소환 통보

의문사규명위, 대학생 실족사 관련  
두차례 불응... “부검만 지휘” 해명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3일 '97년 9월15일 밤 11시쯤 광주시 매곡동 모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어닥 치자 아파트 외벽 케이בל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발표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모씨(당시 27세·지방 K대 4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초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가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양위원장은 최근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완곡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의문사규명위가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문을 보내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검사도 당시 부검 과정만 지휘했을 뿐 체포 지시 등 공권력의 행사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복삼기자

### 의문사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검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97년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김준배(당시 27살)씨 사건을 밝히기 위해 당시 사건 담당 공안검사(현 지청장)에게 두차례나 출두 요구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이 검사의 출두를 성사시키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요청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이 진상규명위 조사대상에 오른 것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본다 고 한다.

이 논란은 진상규명위 활동이 시작된 뒤 그동안 계속되어온 정부 관계기관들의 비협조, 특히 공안기관들의 비협조를 뚝뚝그려 보여주는 사례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대부분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거나 '내사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해 왔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수

사·정보기관 요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가 하면, 진상규명위에 파견된 정부쪽 조사관 일부가 '태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규명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국정원, 검·경, 기무사 등 관련기관에 특별지시를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검사의 출두 불응과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도 이런 비협조 분위기를 잘 반영해준다. 진상규명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기에, 정부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저질러진 의문스런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공안기관 내부에는 의문사 배경을 밝히는 작업을 혐오하고 이에 저항하는 과거세력들이 엄존하고 있는 터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에 강제조사권 부여와 활동기간 연장 등 힘을 실어주지 않는 한 검사의 출두 불응과 같은 비협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 검찰 의문사규명에 협조해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현직검사 출석요청과 검찰-법무부의 불응이 정부기관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검찰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의 활동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1997년 의문사한 김준배씨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과 검찰조사가 이 틀만에 종결된 배경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암울했던 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진실찾기다. 특정인의 잘못을 들춰내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문사 규명과 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과 당사자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 진상규명위의 일부 사건 조사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진상규명위는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사건을 파헤쳤고, 최종길 교수 사

건 조사에서는 당시 중앙정보부 발표와 달리 최교수가 간첩 혐의를 자백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고문 흔적을 밝혀내기도 했다. 장준하 선생 사건도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총 83건 중 대부분의 사건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문사 대부분이 70, 80년대의 일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도 하겠지만 진상규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적극 협조했다면 이처럼 지지부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30년 묵은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기무사령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들 기관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의문사도 해결하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들 기관의 협조를 공개 촉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겨볼 일이다. 국민적 열망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진상규명위를 발족시키지 않았던가. 해당 기관들은 인권국가의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 의문사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97년에 발생한 운동권 학생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당시 담당 검사였던 현직 지청장을 소환했다. 그러나 지청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해 온 결과에서 김씨 사망사건의 내용이 당시 검경 조사내용과 차이가 나고 특히 검찰조사가 이들만에 종결된 점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해 사건의 축소 여부 등 진실을 밝힐 방침이었다.

진상규명위가 벌이고 있는 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시 담당검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 조사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보는 우리는 그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그는 현직에 있는 검사로서 비록 진상규명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넓은 의미에서 공동의 의무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는 지난날 이 사건의 담당검사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가? 어떤 이유에서 거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의자 위치가 아니라면 두번 씩이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검사가 취할 옳은 태도가 아니다.

운동권 출신인 대학생 김 모씨는 지난

97년 9월15일 밤11시쯤 광주광역시 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배를 받던 김씨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용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만에 사건을 종결지었다. 김군의 실족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정검사의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검찰에서 발표했던 수사결과와 진상규명위원회가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틀리게 발견된 점들이 두세 가지 정도 나타나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검사는 두차례에 걸친 소환에 모두 불응하면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정검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였으니 소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건 관련자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아낌없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사실 밝혀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97년 9월 광주 시내 모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김준배씨 사건규명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한편 당시 수사검사의 지휘가 석연치 않았다고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위원회가 3일 발표한 김씨 등 의문사 4건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수배중이었던 광주대 출신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일선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전에 주변인물들을 매수했다는 점등이 새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 당시 사건 지휘검사인 정모검사(현 Y지청장)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 검사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으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상 위원회에 강제소환권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원회는 경찰이 은신처에 들이닥치자 아파트 13층에서부터 케이블선을 잡고 도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김씨를 구타한 혐의(독직폭행)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형태 상임위원은 "김씨는 애초 검경의 발표대로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3층중간까지 내려와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뒤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며 "현재로서는 일단 이같은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정사진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 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 등의 소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중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40여건으로 위원회가 김씨를 구타한 경찰을 고발할 경우 지난해 10월 위원회 출범이후 첫 고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80년대 대표적 의문사중 하나로 지난 88년 정신병원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고모씨는 조사결과 정신병력에 따른 투신자살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72년 문공부장관까지 지낸 전프랑스대사 이수영씨 사망사건은 자살로, 82년 학생운동과 관련돼 감시를 받아오다 의문사한 박현강씨는 당초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학생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죽음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이로써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중 민주화관련 진상규명 1건, 각하 5건, 진정취하 1건 등 모두 6건이 종결처리됐다.

sungjin@yna.co.kr

## • 경찰

### < 경찰 97년까지도 '학원프락치' 활용 >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 경찰이 문민정부 후반기인 지난 97년까지도 수배 학생 등을 추적하면서 추적 학생의 동료 선.후배들을 돈이나 향응으로 매수하는 등 이른바 '학원 프락치'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에 따르면 지난 97년 광주시내 모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의문의 추락사를 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6세)씨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이러한 수사 실태가 밝혀졌다.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는 김씨 주변인물중 대학후배인 B(당시 25세)씨와 선배 C(당시 30세)씨에게 김씨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식사비, 술값 등으로 500만~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B와 C씨도 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첩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천300만~1천500만원의 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학원 전담 정보과 형사도 아니었던 A씨는 'B에게 선불조로 500만원 정도를 줬으며 김씨 검거에 특진이 걸려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첩보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당시 관할서 형사과장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씨는 B씨의 꾀에 의해 경찰이 미리 쳐놓은 덫에 걸려 검거되기 직전, 13층 아파트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3, 4층 부근에서 뛰어 내리거나 떨어졌고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의 폭행을 당한채 숨진 것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 결과 드러났다.

sungjin@yna.co.kr (끝)

# “김준배씨 사망전 경찰이 구타”

## 97년 검거직전 추락사 발표... 축소수사 의혹

### 의문사 규명위 중간 발표 당시 폭행경찰관 고발키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지난 97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검거작전 중 추락사한 김준배(당시 27세)씨 사건규명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과 함께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규명위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 제22호 김준배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소환조사에 불응해온 정모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으며, 구타를 했던 경찰관 A씨를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의뢰키로 했다.

'김준배 사건'은 89년 광주대에 입학, 이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활동하

던 김씨가 97년 9월15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수배를 피해 은신하던 중 이날 밤 11시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다 추락사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우심방과 간파열 등이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바탕으로 추락사로 내사 종결했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B씨가 돈으로 김씨의 대학 후배인 C(당시 25세)씨를 매수, 프락치로 활용해 김씨를 C씨가 살던 아파트로 유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김씨가 케이블선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다 6-9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김씨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높이 4.7-5.7m 지점에서 뛰어내렸다는 당시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새로 공개했다.

진상규명위는 1층에 있었던 경찰 A씨가 김씨가 떨어진 108호 화단으로 달려간 뒤 수차례 발로 밟고 쇠로 된 봉으로 2-3차례 구타했던 사실을 당시 목격자 D, E씨 진술을 통해 새로 밝혀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정 검사는 "의문사진상 규명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동안 유선과 진술서를 통해 협조를 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며 사건 당시 단지 부검을 지휘했을 뿐"이라며 소환 불응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kr

# “97년 의문사 대학생 추락후 구타”

## 규명위 “검·경, 김준배씨 수사 축소... 프락치 공작 의혹”

### 목격자진술 외면... 폭행경찰관 고발 검토 “김씨 유인위해 선후배2명 항응·포섭” 소환거부 담당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97년 광주 매곡동 C아파트에서 단순 추락사했다고 검찰과 경찰이 발표했던 K대 졸업생 김준배씨(당시 27세·한총련 간부)가 사고 직후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검경이 당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유족과 목격자 진술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본보 8월23일자 31면 보도)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당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을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지검 공안부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는 지난 1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검사는 지난달 두차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김씨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씨가 아파트 외벽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다 4층(높이 4.7~5.7m)에서 떨어진 뒤 경

찰 1명이 김씨를 발로 차고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조사 결과 김씨가 추락과 구타에 의한 내외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유족이 주장한 경찰의 구타의혹에 대해 검경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유족과 최초 목격자 진술조차 받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의한 축소,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조사 등 관련서류들이 누락됐고 △변사사건보고서 종합수사보고서 등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며 △부검검정서가 화신되기 전인 사고 발생 이틀만에 내사 종결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위원

회에 “김씨 사건이 시국사건으로 변질 것을 우려해 추석연휴기간 사건을 시급히 종결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김씨 사건에 경찰의 조직적인 프락치 공작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검거를 위해 김씨의 K대학 선·후배 2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항응을 제공하고 검거에 결정적인 재보를 할 경우 1000만원대의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 포섭된 김씨의 후배 B씨가 김씨를 때려 동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정검사는 서면조사에는 응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기자 nomad@kmb.co.kr

# “의문사관련 폭행경찰 고발 방침”



故 김준배씨

경찰이 문민 정부 후반기인 97년까지도 수배학생 추적과정에서 그들의 선배들을 '학원 프락치'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가 3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97년 9월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했던 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당시 27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프락치 공작과 구타사실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수사검사를 조사하기 위해 '동행명령'을 내렸으나 검사는 이에 불응해 마찰을 빚고 있다.

▽발표내용=이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는 김씨의 주변인물 중 대학후배인 B씨(당시 25세)와 선배 C씨(당시 30세)에게 김씨의 은신처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식사비, 술값 등으로 500만~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위원회

▣ 의문사규명위 한총련 김준배씨 사건 조사결과  
경찰 항응받은 후배가 김씨 은신처 신고 도피중 형사기동대원 폭행으로 사망추정  
경찰 97년에도 '학원 프락치' 이용 드러나

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B씨와 C씨도 자신들이 첩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300만~15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위원회에서 털어놓았다는 것.

결국 김씨는 B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13층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3, 4층 부근에서 뛰어내리거나 추락한 뒤 현장에 있던 경찰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金亨泰) 상임위원은 김씨가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김씨가 타고 내려온 케이블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던 김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씨의 옷에 묻었던 신발자국과 일치하는 상흔 △직접사인으로 알

려진 우심방 파열이 구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한국외상학회 등의 소견을 제시했다.

▽고발 등 조치=위원회는 김씨를 구타한 당시 형사기동대원(현 과출소 근무·경찰)에 대해 폭행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위원회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 중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 40여건 가운데 첫 고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사건 발생 하루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당시 정모 검사(현 지청장)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위원회는 정 검사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

기한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는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상 위원회에 강제소환권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된다.

### “검거 피하다 추락사”

▽정 검사 반박=정 검사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성명서에서 “김씨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한 한총련의 간부로 주민과 부검의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수배 중 검거를 피하다 추락사한 것이 분명하다”며 “나는 그의 사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으로 규정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검찰업무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 검사는 “이 사건은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었고 위원회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전화와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해 최대한 협조했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97년 한총련 김준배씨 의문사 관련

# “경찰이 폭행” 고발 검사엔 동행 명령장

### 진상 규명위 밝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3일 1997년 발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광주대 졸업생·당시 27)씨 의문사 진정 사건과 관련, 당시 광주지검 검사로 사건을 지휘했던 정윤기(鄭倫基·43)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또 당시 경찰관의 폭행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폭행 경찰관(현직 경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 사건’은 수배 중이던 김씨가 97년 9월 15일 자정쯤 광주 북구 오치동 C아파트 1308호에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4층 높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지휘 검사 소환=위원회는 당시 鄭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하고▶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유가족의 타살 의혹 제기 등을 무시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梁위원장은 “출두 요구에 불응하면 이번주 중 조사관을 보내 명령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장은 강제구인 효력은 없으며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鄭검사는 “학생·재야인사 등이 참가한 현장검증에서도 추락사라는 결론에 어떤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었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鄭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전에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 “정황상 사인(死因)이 뚜렷하고 부검의 소견에 타살 의혹이 없으면 통상 내사종결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鄭검사는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김씨 사건은 위원회가 다루는 의문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였다는 주장이다.

◇경찰관의 구타=위원회는 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도주하다 추락한 뒤 경찰 1명이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형태(金亨泰·변호사)상임위원은 “구타가 직접 사인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해도 추락과 구타로 인한 복합 원인이거나 적어도 구타가 김씨의 사망을 촉진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용환·정호식 기자 <goodman@joongang.co.kr>

# 97년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 구타사실 드러나

### 규명위 "아파트 외벽서 떨어진뒤 폭행당해" 경찰, 김씨 대학선후배 매수 '프락치' 활용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97년 9월 광주 한 아파트에서 단순 추락사했다고 경찰과 검찰이 발표했던 광주대 졸업생 김준배(당시 27살·한총련 투쟁국장)씨가 추락 직후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명위는 당시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찰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지휘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 사망원인은 추락직후 구타? = 의문사규명위는 김씨 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 경찰과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볼 때, 김씨가 사건이 일어난 광주시 북구 오치동 3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지상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졌으며, 이때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김씨를 경찰 1명이 발로 밟고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형태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케이블선에 남아 있던 흔적 △아파트 벽면에 남은 김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 회사 직원의 진술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과 몸에 있는 상흔의 크기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김준배씨의 사망은 현재로서는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김씨가 경찰의 기습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20여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만 발표했었다.

◇ 사건 은폐·축소했나? = 규명위는 당시 사건 지휘검사가 부검소견서와 구타 장면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틀 만인 9월17일 추락사로 발표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그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를 맡았던 정아무개 검사는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김씨 손가락 안쪽이 모두 타버릴 정도로 고층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점, 부검 결과, 주민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추락에 의한 사고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은)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또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한총련 간부 관련 사건으로, 시기적으로도 법에 규정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전화와 서면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한 만큼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 97년까지 학원프락치 활용 = 규명위는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문민정부 후반기인 97년까지도 이른바 '학원 프락치'를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한 경찰관이 김씨의 대학 선배와 후배를 각각 접촉해 김씨의 은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300만~15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규명위는 설명했다. 규명위는 "이런 사실이 '선불로 500만 원을 줬다'는 당시 관련 경찰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진상위 조사 결과 김씨의 후배는 조선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지내던 김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 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 검거자전을 직접 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환 정혁준 기자 ahn@hani.co.kr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형태 규명위 상임위원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광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한 김준배씨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서경신 기자 raoul@hani.co.kr

#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이 구타

### 진상규명위 "부검결과 나오기전 추락사 종결"

#### "선후배 포섭 '프락치' 활용"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奎·진상규명위)는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시절인 97년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김준배씨(당시 27세·광주대 무역학과 졸업)가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린 뒤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당시 석연치 않게 수사를 종결한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제 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씨가 97년 9월15일 은신처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 아파트 13층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다 10층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발표하면서 이틀만에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진상규명위 김형태(金亨泰) 상임위원은 "김씨가 경찰에게 몽둥이와 발로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2명의 증

언이 있었다"면서 "김씨 옷의 신발 자국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 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상학회의 소견도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시 수사지휘를 맡은 정 검사를 조사한 뒤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 경찰관 역시 독직 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김씨의 선후배에게 1,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프락치로 활용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발생 이틀만에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경찰의 구타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밝혔다.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吳鍾烈)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포섭됐던 김씨 선후배들이 곧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검사는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이미 최대한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추락사는 진상규명위가 다룰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아니고 ▲진상규명위가 사망 자체와 관련이 없는 검사를 부당하게 피정인으로 규정했으며 ▲당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 “97년 의문사 학생 경찰이 구타”

## 한총련 김준배씨 ‘추락사’ 축소수사 의혹 진상규명위 “검거위해 선후배 금품매수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 1997년 9월 광주 모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한 김준배씨 사건 규명과 관련,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과 수사검사의 지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중간 발표에 따르면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던 김씨의 죽음에 경찰의 구타사실과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주변인물을 매수하는 프락치 활동이 있었음이 새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 당시 사건 지휘검사인 정모 검사가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발생 하루 만에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목적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아 정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그러나 정검사는 “그동안 유선과 서면을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해 왔고, 김씨는 이적단체인 한총련 간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아니고 당시 부검과 현장검증에 학생대표와 재야인사, 언론사 기자까지 참여했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김씨를 구타한 혐의(독직폭행)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문민정부인 97년에도 수배학생 추적을 위해 학생의 동료, 선·후배에게 향응은 물론 1천3백만~1천5백만원 정도의 돈까지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김씨는 예초 검경의 발표대로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화단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뒤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며 “지금까지 조사결과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 97년 대학생 김준배씨 사망사건 관련

# 의문사규명추-검찰 대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 3일 1997년 9월 광주 시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김준배씨 사건에 대해 의문사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사건지휘 검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 검찰과 협연한 공방이 일고 있다.

#### 의문사 위원회의 검찰의 김준배씨 사건 관련 쟁점

위원회	검찰
추락과 구타 충격에 의한 내의 손상 복합 작용	사망 원인 추락에 의한 심정지 등 폭행
지상 9.7~4.5m	추락 지점 옥저 지상 8.6m
목격자 2명 있음, 상치형인은 추락인지 구타인지 불명치 않음	구타 부검 기록에 구타흔적 없음
음용 음료제기, 목상, 최초 목격지 조사 능력 등 축소 수사 의혹	검찰은 피검자 최환 의문사 특별법 규정에 합당한 사건 여부

### 규명추 “의문사 가능성” 당시 검사 소환 결정

### 검찰선 “명백한 추락사... 소환은 권한 남용”

위원회는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김씨가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선을 잡고 도망치다 4.7~5.7m 아래로 떨어졌으며 승차 전 경찰의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건 당시 추락지점이 지상 8.4m이며 경찰의 폭행은 없었다는 검·경의 부검 및 수사결과와는 큰 차가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당시 번사사건 지휘검사였던 정문기(鄭文基·현 영일지정장)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발생 하루만에 추락사로 내사종결하고 ▲사건의 직접목적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 검사에게 소환조사를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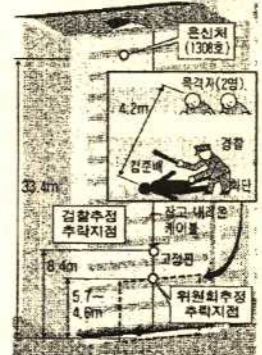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위원회가 추락사가 분명한 사안을 무리하게 의문사로 몰아 가고 있으며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은 법적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

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5m짜리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손이 까맣게 타고 실정이 떨어져 나간 점으로 미뤄 자유낙하에 가까운 속도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이라며 “유족과 학생, 기자 등이 입회한 부검에서도 목동아 등에 의한 외상흔적이 없었으며 증인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문사 가능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도 ▲김씨가 이적단체인 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거나 권위주의 시절 독재에 항거한 인물이 아니며 ▲추락사로 사인이 명백하고 ▲정 검사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김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점을 들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조사 및 소환 근거가 없는 권한남용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검사도 이날 해명서를 통해 “그동안 서면과 전화로 최대한 협조했는데도 진상규명과는 무관한 의도로 지휘검사를 피진정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반발

#### 김준배 추락사 사건 현장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국과수감정 결과와 김씨 옷에 묻은 타인의 신발자국, 케이블회사 직원과 인근 주민의 목격진술 등이 있는 이상 지휘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검사가 출두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법적으로 출석을 강요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현장검시 소환을 둘러싼 규명위원회와 검찰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영모기자 young5@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 “김씨 추락직후 경찰이 구타”

### 의문사규명추 중간조사 발표 대학후배 프락치 활용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97년 9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광주대생 김준배(당시 26세·한총련 투쟁국장·사진)씨 사건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김씨가 추락 직후 경찰에게 구타 당했으며, 검찰이 축소 수사한 의혹이 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씨는 예초 검경의 발표대로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3층 중간까지 내려와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뒤 경찰



에 의해 구타당한 것으로 목격자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며 “현재로서는 일단 이 같은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당시 1층에 있던 경찰 A씨가 김씨가 떨어진 108호 화단으로 떨어진 뒤 수차례 발로 밟고 붐으로 2.3차례 구타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추락한 김씨를 구타했던 A씨를 독직 폭행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씨는 1997년 9월15일 후배가 재공한 광주 북구 오치동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수배를 피해 은신하던 중 이날 오후 11시에 경찰이 들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다 추락사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우심반과 장파열 등이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바탕으로 추락사로 내사종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B씨가 돈으로 김씨의 대학 후배인 C(당시 25세)씨를 매수, 프락치로 활용해 김씨를 C씨가 살던 아파트로 유인한 사실을 밝혀냈다.

/정영모기자



# “추락死 광주대생 경찰구타도 원인”

## 의문사委, 97년 김준배씨 사망 ‘축소 수사’ 조사 당시 사건檢事, “다른 의도 있다” 출석요구 거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3일 한총련 투쟁극장으로 수배 중이던 김준배(당시 광주대)씨가 97년 9월 광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으며, 사건 지휘 검사였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의 지휘가 석연치 않아 정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초 정 검사에게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거부당했다. 위원회의 김형태 상임위원은 “김씨는 검·경 발표와 달리 3층 중간까지 내려와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뒤 경찰에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아파트 벽면의 김씨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 진술 ▲김씨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정사진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 등의 소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 검사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하루 만에 국과수 부검·감정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 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 석연치 않아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떨어진 뒤 김씨를 구타한 혐의(독직폭행)가 있다고 보고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 검사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기자들에게 배포,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당시 사건은 의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검사는 “당시 유족과 학생대표, 기자까지 참여한 현장검증 후 추락사로 종결한 데다 전화와 서면으로 위원회에 사안을 설명했는데 굳이 동행명령을 강행하려는 것은 의문사 진상규명과 달리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崔源錫기자 yuwhan29@chosun.com

# 97년 의문추락사 김준배씨 ‘사망전 경찰이 구타’ 밝혀져

## 규명위 “당시 검사 소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997년 9월 광주시 청암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김준배씨가 사망전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정모 검사(현 Y지청장)를 소환조사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김준배 사건’은 89년 광주대 입학후 한총련 투쟁극장으로 활동하던 김씨가 광주시 북구 청암아파트에 은신하던중 97년 9월15일 오후 11시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의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우심방과 간 파열 등이 추락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바탕으로 단순 추락사로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날 “경찰

의 검거를 피해 아파트 13층에서부터 케이블선을 잡고 도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를 형사기동대원이 몽둥이로 2~3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락외에 폭행도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발생 하루만에 ‘추락사’로 내사종결했고,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가족의 경찰구타 의혹을 묵살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정 검사를 소환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황진영·이우승기자 buddy@sgt.co.kr

# 문민정부 때도 '학원프락치 공작'

## “97년 추락사 발표한 김준배씨 2~3층서 떨어진 후 구타 당해”

### 의문사진상규명위 “담당검사 출두해 진상 밝혀야”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형태 제1상임위원(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지난 97년 광주 시 모아파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 추락사한 것으로 조작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건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97년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알려진 김준배(광주대 당시 27세)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구타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김씨 검거를 위해 선두배 등 주변 인물을 금품으로 매수하는 '학원프락치 공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는 2층과 3층 사이(4.7m~5.7m 높이)에서 1층 화단으로 떨어진 후 경찰에게 끈봉과 발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 흔적 등으로 미뤄볼 때 직접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 구타에 대한 언급없이 김씨가 13층 아파트에서 도주하던 중 6~9층 사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당시 ‘종합수사보고서’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류정민 기자 donack@labo.com

## 김준배씨 중간수사 발표 결과와 전망

#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 제기돼

지난 97년 김준배(한총련 투쟁국장·당시 27세)씨 검거를 위해 경찰이 ‘학원프락치 공작’을 벌인 점은 군사독재 시절 자행됐던 반인륜적 범죄가 문민정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씨 사건은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따라서 김씨를 죽음으로 몰고간 직접 원인이 경찰구타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선행과제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는 3일 “김씨 사망사건은 의문사가 아니라 단순 추락사인데다 김씨 사망과 관련이 없는 변사사건 지휘검사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학원프락치 공작=전남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당시 순경)씨는 김씨의 은신처

에 대한 첩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김씨의 후배 B(당시 25)씨에게 1300만~1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학원프락치’ 공작을 요구했다. B씨는 김씨의 선배 C(당시 30세)씨와 함께 경찰 A씨로부터 500만~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고 김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 경찰의 검거를 도왔다. 김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은 “A씨가 B씨에게 선불조로 500만원 정도의 돈을 줬으며 김씨 검거에 특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첩보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태권도 4단이 2~3층 높이에서 추락사(?)=김씨의 아버지 김현국(66)씨에 따르면 김씨는 태권도 4단으로 운동을 잘하는 건장한 청년이었으며 3~4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경험도 적

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씨의 주변인물 중 대학 후배인 B(당시 25세)씨와 선배 C(당시 30세)씨에게 접근, 김씨 검거에 협조하는 대가로 500만~1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와관련 진상규명위는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한 점 △사건 목격자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조사키로 했다.

김형태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경찰의 구타사실이나 학원프락치 공작을 벌인 점 등은 이번엔 처음 밝혀진 것”이라며 “구타가 사망을 촉진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한국외상학회와 소견이 나온 만큼 사안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 김현국(66·전남 장흥군)씨는 이날 “2남2녀중 장남인 아들이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은 불립 없는 사실”이라며 “프락치로 몰고 갔던 아들의 선두배가 최근 나를 찾아와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실로 하면서 양심선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ack@labo.com

지 않다. 김씨가 추락한 지점은 2층과 3층 사이로 지상에서 4.7m~5.7m 높이지만 손으로 잡고 있던 지점이 아닌 발을 기준으로 할 때는 더욱 낮아진다.

또 떨어진 지점은 부드러운 흙이 있는 화단이기에 2층 높이에서 추락사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김씨의 사망은 추락과 구타의 충격에 의한 내·외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오히려도 전에 추락사로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김형태 진상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김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축소·은폐에 대한 가족들의 문제제기가 상당부분 타당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ack@labo.com

● 97년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 구타사실 드러나

# “당시 검사 15일까지 동행명령 집행”

## 의문사규명위, 추락높이 등 의혹 규명 방침 ... 해당검사 “소환에 불응”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씨 사인을 가리기 위해 단순 추락사로 발표한 당시 수사지휘 검사를 오는 15일까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방침이어서 검찰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의문사 규명위는 3일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경찰의 추적을 받던 김씨가 광주 모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선을 잡고 도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져 숨졌으며 추락한 김씨를 경찰 1명이 발로 밟고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김씨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2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정모 검사는 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유족과 학생 대표가 참여한 부검과 현장검증을 통해 추락사로 종결한 사안으로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따라서 의문사 규명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 의문사 규명위는 김씨의 사인을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단순추락사한

게 아니라 추락 직후 충격과 경찰의 구타가 서로 상승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의문사 규명위는 △국과수 감정 결과 케이블선에 남아있던 흔적 스케일본선이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는 점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던 김씨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의 진술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등을 들고 있다. 김씨가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4.7~5.7m 아래까지 내려오다 떨어졌고 이어서 경찰의 구타행위가 뒤따랐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김씨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도 최근 김씨 사인을 단순 추락사였다는 당시 소견을 바꿔 직접 사인이 추락인지 구타인지 불분명하다고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 검사는 “김씨가 5mm 짜리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손이 까맣게 타 버린 점을 볼 때 고층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였고 부검 결과, 주민들의 증언 등도 추락사야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 의문사 규명위는 당시 수사 당국이 부검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타장면을 본 최초 목격자와 유가족의 구타의혹 제기까지 무시하면서 사고발생 이틀만인 9월 17일 서둘러 추락사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

다고 밝혔다.

의문사 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수사당국이 △김씨 사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추락 높이(4.7~5.7m)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락사로 결론을 냈고 △추락직후 경찰의 구타를 지켜본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듬해 종결한 유가족의 구타의혹 진정권도 단순 추락사로 결론내려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당시 경찰이 김씨 옷에 묻은 발자국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면서 신발자국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슨 물질인지를 물어 흙 같은 물질이 정착됐다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구타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 검사는 전화 및 서면조사를 통해 △당시 광주가 유재운 사망 여파로 너무 혼란스런 상황에서 사건을 질질 끌 경우 시위의 악순환이 우려됐고 △최초 목격자가 구타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경찰의 보고가 있었으며 △당시 정황과 목격자 증언도 추락사가 명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문사 규명위는 전화 및 서면조사에서 정 검사가 진술한 내용과 의문사 규명위가 그동안 수집한 증언 및 물증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 정 검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김준배씨 사망사건 재조사 진상위 주장에 검찰 반박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사건 재조사를 둘러싸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법무부·검찰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창이다.

위원회측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을 '김씨가 경찰검거를 피해 도주하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단순 추락사'가 아닌 경찰의 프락치 공작과 추락후 구타에 의한 의문사'라며 사건당시 검·경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정모(현 Y지청장) 검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드디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위원회측의 이같은 강경 조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겉으로는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한시 기구인 위원회측과 법무부·검찰간의 실력대결 양상으로 비쳐지는 걸 우려해 일단 정검사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측

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김씨 사건이 의문사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다. 검찰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만큼 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한 법률상으로도 이 사건은 위원회측의 조사대상이 아니며 무리가 있는 조사"라고 잘라 말했다. 정검사의 소환불응에 대해서도 "검사소환이 선례가 될 경우 수사 독립성이 확보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사자인 정검사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출석요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학생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부검과 현장검증에서 추락사가 명백해 내사종결했으며 부검의도 구타흔적이 없고 갑작스런 충격과 압박 때문에 의심방·우엽 파열에 의한 다량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위원회측이 제시한 구타 목격자에 대해서도 "당시 추락사라는 진술을 했다"며 축소수사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구타한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최영범기자 youngbchoi@munhwa.co.kr

### 현장기자



박병권  
사회부

### 의문사추-법무부 힘겨루기 양상 씘쓸

법무부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97년 9월 광주시내 모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김준배씨 사건규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은 사소한 기관간 갈등으로 보아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당시 수사지휘 검사였던 춘천지검 영월지청장인 정윤기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진상규명위는 당시 아파트에서 추락한 김씨를 경찰관이 구타한 것도 사망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되는데도 이 부분을 포함한 검찰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윤기 검사는 이 사건을 진상규명위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관련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

하고 있다. 정검사는 우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법의 입법목적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규정된 점을 들고 있다. 그는 나아가 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이란 '69년 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행동'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적단체인 제5기 한총련의 핵심 구성원인 투쟁국장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던 김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 자신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위원회의 위상강화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직검사라도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과 이같은 행위는 검찰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각각 일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같은 기관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bkpark@kmib.co.kr

### 의문사 김준배씨 수사 검사 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지참한 조사관 3명을 파견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정 검사는 "김씨 사망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은데다 이미 전화와 서면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만 전달했다.

진상규명위는 "정 검사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글에서 당시 변사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 부분,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 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종결한 점 등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소환권이 없는 진상규명위는 오는 7일 심사를 통해 정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복삼기자**

### 의문사 김준배씨 수사검사 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본보 4일자 A 29면 보도) 조사와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모 검사(현 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그를 위원회로 데려가려 시도했으나 정 검사는 이에 불응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소환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 검사가 위원회의 의문점에 대해 전화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진술이 다른 목격자 등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사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상 범인은거나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김준배씨 사건 다시 조사한다

### 진상규명위, 정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7년 의문사한 김준배씨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에게 5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노동일보 9월4일자 15면 참조)

진상규명위는 "전화, 서면등을 통해 조사를 하는 동안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며 "진실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발부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당시 변사사건이 유족, 학생대표, 기자까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정검사는 주장하지만 구타,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강제소환 규정 없기 때문에 정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김준배씨 사망' 당시 檢事에 동행명령장

### 의문사위 "수사 불충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5일 수배 중 추락사한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정 검사는 최근 문건을 통해 '변사사건이 유족, 학생대표, 기자들까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 부분,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강제소환권이 없으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 계승 국민연대 등 유족 민간단체들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정 검사에 대한 합의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崔源錫기자 yuwhan29@chosun.com

# ‘김준배씨 의문死’ 수사검사 진상규명촉 진행명령 거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鄭倫基) 검사(현 영월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정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구타 부분과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 3명을 영월지청에 보내 정 검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 검사는 “위원회측이 추가 질의할 경우 직접 출두하지 않는 대신 전화나 서면을 통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강제소환권 규정이 없어 정 검사의 거부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영월시내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정 검사의 동행을 요구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 김준배씨 의문사수사 당시 검사에 동행장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정윤기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정 검사는 당시 변사사건이 유족·학생대표·기자들까지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하지만, 구타 부분과 아파트 케이블선 이탈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정 검사는 위원회의 의문점에 대해 전화 및 서면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대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황진영기자 buddy@sgt.co.kr

# 베일 벗은 ‘대선 전야 의문사’

## 진상규명위, 1997년 사망 김준배씨 조사 결과 발표... 프락치 공작·구타 가능성 밝혀

고재규·차형석 기자

“준배야, 이놈아!” 목이 메인 김현국씨(66)는 말을 잊지 못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김씨는 아들의 무덤 앞에 서자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어느 때보다 서글프게 울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

해가 없었다. 첩보 입수자 도 아무개 형사는 1308호 문이 열릴 것이며, 아파트 안에는 김준배씨를 포함해 2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기동대원에게 귀띔했다. 밤 11시 도형사의 말대로 문이 열렸고,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기동대원은 보이는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준배씨가 베란다를 넘어 텔레비전 케이블과 와이어를

방식도 수궁할 수 없었다. 국회·국무총리실·청와대로 진정서를 보내 재수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아버지 김현국씨는 만사를 제쳐놓고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는 데 매달렸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4백22일 동안 벌인 농성에도 동참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조사에 나선 지 8개월 만에 김준배씨 사건은 의혹의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확고부동:1997년 당시 김준배씨 변사 사건을 맡았던 양승규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왼쪽)은 여전히 추락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가 김준배씨를 폭행했다고 지목한 이영진 형사(오른쪽)는 구타는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 경찰, 항응 제공하며 ‘프락치 공작’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준배씨는 프락치 공작의 희생양이었다. 최초 첩보 입수자였던 도 아무개 형사는 특진을 노리고 사비를 털어 김준배씨 검거에 나섰다. 운동권 학생을 전담하는 보안수사대 소속이 아닌 형사기동대 소속 도형사는 1계급 특진이 걸린 김준배씨를 붙잡기 위해 공을 들였다. 김씨는 당시 한총련 의장이던 강위원씨(전남대 총학생회장)와 함께 특진이 걸린 거물급 수배자였다.

도형사는 몇달 전부터 김씨의 선배인 이민재(가명)에게 5백만~천만 원 항응을 제공하며 환심을 샀고, 이씨로부터 김준배씨와 절친한 후배 최상도(가명)를 소개받았다. 최씨에 따르면, 도형사는 김준배씨의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제공하면 1천5백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씨는 조선대에 피신해 있던 김준배씨를 직접 찾아가 추석 때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다. 그는 김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체포 작전이 벌어진 9월 15일 밤 8시 도형사를 만나 집의 구조와 상황을 자세히 알렸다. 도형사는 형사기동대를 이끌고 김씨 검거 작전에 들어갔다. 김준배씨가 작전

혹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아버지의 노력이 결국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3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진정 22호 김준배씨(당시 27세·광주대 졸) 사건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부족하

나마 김씨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풀어주었다.

1997년 9월15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 초 아파트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2소대 소속 형사 25명이 급파되었다. 1계급 특진이 걸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소재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기동대원은 김준배씨의 은신처라고

보고 밀으며 내려간 것이다. 경찰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김준배씨는 108호 화단 옆에서 발견되었다. 김씨는 의식이 불투명해 곧장 앰블런스에 실려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하지만 9월16일 오전 0시33분께 그는 숨졌다.

변사 사건을 담당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9월 17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추락사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13층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 다 중심을 잃고 추락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발표에 유가족은 반발했다. 유가족은 체포 과정이 석연치 않고, 부검 때 발견된 오른쪽 가슴의 피멍을 들어 경찰이 구타했을 가능성이 제기했다.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수사



“내 아들 준배야”: 김현국씨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들고 광주 망월동 묘역에 묻힌 아들 김준배씨를 찾아 피눈물을 쏟았다.

도중에 숨지자 최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9월17일 북부경찰서에서 김현국씨를 만난 그는 “아버님 짜맞추기 수사입니다”라며 양심 선언을 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형사를 만난 뒤 최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범인은닉죄로 구속되었다가 김준배씨의 장례식이 치러질 무렵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준배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은 프락치 공작에 대한 심증을 굳혔으나 물증을 잡지 못했다. 워낙 걸끄러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상도 역시 프락치 공작의 희생자다.” 최상도씨의 절친한 친구 박경근씨(30)는 이렇게 전했다. 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씨는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1차

조사에서는 프락치 공작을 부인하다가 2차 조사 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었다. 위원회 조사를 세 차례 받은 뒤 이민재·최상도 씨는 지난 7월7일 아버지 김현국씨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위원회는 김준배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구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냈다. 경찰 발표와 달리 김씨는 균형을 유지한 채 마치 레펠을 타듯이 4층 아래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곧장 떨어져 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케이בל선을 잡고 4층 아래까지 내려온 흔적이 있고, 발자국임이 분명한 표시가 아파트 외벽에 규칙적으로 나 있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케이블선 감정 결과도 이를 말해준다. 위원회는 운동신경이 뛰어나 태권도 4단이었던 김씨가 4층 아래(3.6m~4.7m) 지점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구타 흔적이 없는 추락사로 단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 2월 일찌감치 경찰이 김준배씨를 구타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현장을 목격했던 한 시민은 엎드려 있던 김씨를 발견한 경찰이 발로 밟고 경찰봉을 휘둘러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둔탁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강도 높은 구타였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관련자 60여 명을 모두 조사한 뒤 최초 발견자가 구타자였음을 확인했다. 혐의를



한총련 시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받은 이는 이영진 형사이다. 하지만 이형사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위원회가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라며 반발했다. 이씨는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도 좋으며 취재에 적극 임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위원회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자신 있다는 태도다. 김준배씨의 시체에서 추락사했을 때 생기는 힘든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양쪽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추락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전면으로 떨어지야 한다. 그런데 전면으로 떨어졌다는 김씨의 얼굴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 전면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충격이 가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증거이다. 또한 부검 때 김씨가 입고 있던 옷에 운동화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부분에 피명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역시 분명한 구타 흔적이라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그렇다고 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구타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조차 추락과 구타

가운데 어느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아담미저 “조용히 넘어가지”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기에 바빴다. 얼마나 급하게 처리했는지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마다 김씨 사망의 중요한 단서인 추락 지점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각 보고서에 걸쳐 난이 아예 없고, 작성자도 빠져 있어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인 이후 처음으로 소환 대상자가 공식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준배씨 변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정아무개 검사는 “김준배의 죽음은 의문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신을 밝혔다. 정검사는 검찰과 법원이 지금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간부들을 사법 처리하고 있는 마당에 위원회가 한총련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결정하면 모순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출두 거부 의사를 위원회에 전했다.

위원회는 정검사를 반드시 소환해, 부검 보

### ‘뜨거운 감자’ 김준배 한총련 출신... ‘폭행 경찰관’ 공소 시효도 남아

고서와 국과수 감정 결과도 통보받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 이유를 물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검사에게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그레도 출두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두를 거부한다면 위원회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김준배 사건이 뜨거운 감자인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송교도소에

서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씨 사건을 처리할 때는, 진실은 밝혔지만 공소 시효가 지나 관련 교도관을 고발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김준배씨 사건 폭행 경찰관은 현행법에 따라 고소·고발할 수 있다. 김형태 상임위원은 관련 경찰관을 최소한 폭행·가혹행위라고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김준배씨를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남남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투쟁국장 출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위원회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

의 목적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위원회에 결정적인 증인을 했던 시민은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박하고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승규 당시 광주북부서 형사과장은 김준배 사건이 자칫 제2의 유재을 사건이 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해 3월21일 조선대생 유재을씨가 시위 과정에서 숨겨 장례식이 치러진 5월까지 시위가 그치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김준배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심지어 야당인 국회의마저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랐다. 동교동 실세인 김옥두 의원이 김현국씨를 직접 만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망월동이 아닌 장흥에 매장하자"라고 설득했다.

양승규 형사과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한 경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했는데, 본청에서부터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난리였다. 변사 사건이 시국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내사 종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증언했다.

부검의 박교수 교수도 "명절에는 부검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경찰의 간곡한 요청으로 추석날 부검했다"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부검 전에 경찰로부터 한 주민이 김준배씨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황 설명을 들었다. 박교수는 위원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구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위원회 발표로 김준배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오히려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은 형국이다(40쪽 상자 기사 참조).

위원회 조사 결과를 들려주기 위해 아들이 묻힌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은 김현국씨는 다짐했다. "내가 못다 한 길을 내가 가마." 1997년 아들을 뒤따라 가겠다는 심정으로 두 번이나 수면제를 먹은 김씨는, 아들의 뜻을 잇고자 지금 장흥군 농민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 회복이다." 김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

# '왕년의 적' 손잡고 미궁 속에서 길찾기

### 민간·기관 '2인1조', 집요하게 추적...관계 기관 비협조 등 난관 많아

고재규 기자 unjusa@e-sisa.co.kr

**김**준배 사건은 민·관 조사관의 합작품이다. 민간에서 파견된 강상구 조사관(30)을 비롯해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지난 8개월 동안 3천5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었다. 60명이 넘는 관련자를 세 번 이상씩 소환해 조사했고, 수시로 광주를 오가며 현장 조사를 벌였다. 민·관 조사관의 이런 협력은 미궁에 빠진 사건을 파헤친 원동력이었다. 강상구 조사관은 "경찰 쪽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근성을 발휘한 덕이다"라며 공을 넘겼다.

민간 조사관 한 사람과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 한 사람이 팀을 이룬 2인1조 체계는 의문 사건상규명위원회(위원회)의 기본 단위다.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보통 4~5건씩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어 호흡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아서 위원회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성과도 내고 있지만 현재 안팎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무엇보다도 관계 기관의 협조가 아쉽다. 지난 7월25일 양승규 위원장과

김형태 상임위원은 최경원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준배 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소환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최장관은 검사가 수사한 내용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 수사권 독립이 흔들린다고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김준배 사건의 경우 프락치 공작 여부를 밝혀줄 최상도 씨에 대한 조사 기록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출발: 양승규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는 이유로 광주지검 공안부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법무부뿐 아니라 국방부·국정원의 협력도 형식적이다.

#### 유가협 등 시민단체 '무서운 시어머니'

관련 기관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는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최근 고문 사실이 드러난 최종길 교수 사건도 국정원이 자료를 제공해 단서를 잡았다. 국정원은 이 자료 역시 처음에는 없다고 뱉혔다

다가, 양승규 위원장이 신 건 국정원장을 만나 답판을 지은 뒤에야 내놓았다.

위원회의 산파인 유가족의 불만도 위원회로서는 감당하기 벅거운 짐이다. 무려 4백22일 동안 국회와 천막 농성을 벌여 특별법과 위원회를 탄생시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관련 시민단체는 가장 무서운 시어머니이다.

지난 7월 말 시민단체 출신인 과장급 4명과

는데, 이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이해의 장을 넓히기 위해 위원회는 현재 '중간 설명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9월1일 현재 열일곱 번째 중간 설명회가 열렸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위원회 내부에 있다. 지난 8월20일 최종길 교수가 고문을 받다 모멸감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가자 위원회는 발칵 뒤집혔다.



다시 거리로: 유가족들은 허울뿐인 특별법을 개정시켜 내년 3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시켰다.

팀장 1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반성하고 인적 쇄신을 하라고 요구하며 벌인 집단 행동이었다. 위원회로서는 가장 큰 위기였다. 유가협 등 유가족이 진전이 없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 보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뒤였다.

양승규 위원장은 곧바로 모든 사표를 반려했다. 양위원장은 "과장들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위원장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기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

공식 기자회견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도 문제였지만, 일부 내용이 위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급한 불을 껐다.

#### 실질적 조사권 없어 입씨름으로 일관

그런데 이 '사고'는 한동안 잠잠했던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자체 파악되었다. '민·관의 불협화음'. 위원회로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김준배 사건처럼 궁합이 맞아 진척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2인1조 시

스템에서 반목과 질시가 생긴다면 위원회가 게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자를 소환하기 전에, 서로 왜 그 관련자를 조사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려 논쟁하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경찰 쪽에서 파견된 한 인사가 개별 사안에 대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 구두로 보고하는 바람에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말로만 돌았던 기관원 출신들의 파견 기관 눈치보기 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내부에서 극비로 처리하고 문제의 인물을 원대 복귀시켰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기관 출신 조사관이 소속 기관과 관련한 정보를 흘린다면 위원회 활동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양승규 위원장은 "기관에 보고했는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아닌 특별법 그 자체다. 지난 정기국회 때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6개월씩 시기를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실질적인 조사권을 주지 않았다. 통화 내역 하나 제대로 확인할 길 없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없다. 오로지 관련자를 불러서 입씨름을 벌이는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환에 불응하거나, 옹호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조사관들은 난감해진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정운회 사업국장은 2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이상태로는 기간만 연장될 뿐이지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15개월 동안 조사하지만, 실제로 2명이 4~5건을 병행해 조사하다 보니 한 건당 길어야 3개월씩만 조사할 뿐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시능만 하도록 만들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정기 유가협 회장(73)도 "위원회는 역사적인 진통 끝에 탄생한 만큼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권한·인력 한계 뼈저리게 느낀다”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 인터뷰 / “9월부터 성과물 나올 것”

고재규 기자 unjusa@e-sisa.co.kr

**재** 아 출신 황인성 사무국장은 인터뷰하는 동안 유난히 ‘관용’을 강조했다. 그는 왜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을 지닌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을까. 황사무국장은 아마도 무던히 참고 용서하느라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는 1970~1980년대 그 어두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접수된 85건 가운데 공식적으로 8건을 해결했다.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

유가족 처지에서는 진척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도 가능한 한 빠르고, 그러면서도 한점 의혹 없이 성실하게 조사하려 한다. 조사 권한과 인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예를 들면 이철규 열사 사건은 경찰·검찰·국정감사 등 수백명 인력이 동원되어 조사했다. 그런데 우리는 단 두 사람이 조사하고 있다. 자료를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인력과

시간이다.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켜 봐 달라. 앞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한 사항부터 발표하면서 속도를 낼 작정이다. 9월부터 일정 정도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가능하면 연말 안으로 모든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민간단체 출신 조사관과 기관 조사관 사이의 갈등이 위원회 활동에 걸림돌이 아닌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내부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조

작은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쫓고 쫓기던 관계였다. 이런 차이가 업무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민간 조사관만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파견된 조사관만으로 조사를 진행해서도 안된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난번에 민간 조사관과 기관 출신 조사관을 따로 불러 불만 사항이 있는지 경청했다. 얼굴을 맞대고는 하지 못

“의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한 시대를 함께 겪은 국민 모두의 문제이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

황인성 사무국장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생각보다 인식 차이가 컸다.

그렇다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 않나?

위원회에서는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과장급들이 지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다.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국정원·법무부·기무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가 잘 되는가?

같이 보기에 협조적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질이다.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넘겨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 힘들다. 우리 내부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다. 필요한 자료를 꼭 집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몽뚱그려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 관련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우선 우리 내부의 조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어느 조직이나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문서고를 뒤져서라도 꼭 관련 자료를 찾아내겠다.

위원회 활동이 법적으로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위원회 나름의 복안이 있는가?

반인도적인 범죄에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될 만큼 보편적이다. 우리 위원회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사권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통화 내역이

나 금융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은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이 만큼 진행한 것은 국민들의 힘이 컸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인권을 억압하는 정권 아래에서는 누구나 희생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가족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불행한 시대를 함께 겪은 국민 모두의 문제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죽음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

## 의문사 김준배씨 후배 양심선언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지난 97년 의문의 추락사 당시 경찰구타사실이 밝혀진 김준배(당시 26. 한총련 투쟁국장)씨의 후배 B(29)씨는 6일 저녁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학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김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B씨는 "한 형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2차례 정도 항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형사가 준배형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대가로 3천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배중인 형이 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9월 추석전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는 후배 B씨의 말을 듣고 B씨의 거주지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 C아파트 1308호에 머물다 경찰의 포위를 당했으며, 아파트 외벽 케이블 선을 타고 달아나다가 3층 아래부근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후 경찰의 구타를 받은 가운데 숨졌다.

의문사 규명위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중 관련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고백을 한 것은 B씨의 양심선언이 처음이다.

sungjin@yna.co.kr (끝) <저작권 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문사 김준배씨 후배 '문민 프락치' 양심고백

## “돈받고 준배형 경찰 넘겼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악몽

지난 1997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나다 의문사한 광주대 졸업생 김준배(당시 26살·한총련 투쟁국장)씨를 경찰에 '넘겨준' 대학 후배가 6일 '눈물의 양심선언'을 했다.

ㄱ씨(29)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준배형 그리고 아버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고백문을 읽으며 용서를 빌었다.

### 또다른 선배통해 형사 접근

ㄱ씨가 자신을 프락치로 이용한 형사를 만나게 된 것은 지난 1997년 7~8월께. 군대에서 제대한 지 한달여 뒤 김준배씨등과 함께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 ㄴ씨와 어울리게 되면서부터였다. 선배 ㄴ씨는 처음엔 백화점 직원이라며 형사 ㄷ씨를 소개해줬고, ㄱ씨는 이들과 가끔 술자리에서 어울리게 됐다.

ㄱ씨와 이들의 접촉 과정은 당시 학원담당 형사들의 프락치 활용 실상을 잘 보여준다.

ㄱ씨는 "선배 ㄴ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ㄷ씨가 합석해온 뒤 술값을 지불하는 식으로 술대접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수차례 술자리 만남

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그는 백화점 직원이라던 ㄷ씨가 형사란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스스럼없이 친해진 뒤라 별 거부감없이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달쯤이나 만났을까... ㄴ선배를 통해 ㄷ형사의 제의를 듣게 됐어요. 처음엔 준배 형도 이제 수배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ㄴ선배는 경찰쪽에서 돈도 3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약속한 돈을 받진 못했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그해 9월13일 ㄱ씨의 권유로 그가 머물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고, 3일뒤 ㄱ씨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쫓기다 변을 당하고 말았다.

### 약속한 3500만원 못받아

김씨의 사망 직후 현장에서 '저항하던' ㄱ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한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날 이후의 생활은 죄의식의 연속이었다"는 그는 경찰에 속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엔 "준배형이 없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 봐야 변명이 될 뿐"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정세라·최혜정 기자 seraj@hani.co.kr

## “김준배씨 은신처 경찰에 알려줬다” 金씨후배 '양심선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1997년 의문의 추락사 당시 경찰구타 사실이 밝혀진 김준배(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씨의 후배 B(29)씨는 6일 저녁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학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김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B씨는 "한 형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2차례 정도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형사가 준배형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대가로 3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배중인 형이 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9월 추석전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는 후배 B씨의 말을 듣고 B씨의 거주지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 C아파트 1308호에 머물다 경찰의 포위를 당했으며,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을 타고 달아나다가 3층 아래부근에서 떨어지거나 뛰어 내린 후 경찰의 구타를 받은 가운데 숨졌다.

### “의문사 김준배씨 은신처 경찰 항응받고 알려줬다”

프락치활동 후배 양심선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1997년 의문사 당시 경찰에 구타당한 사실이 밝혀진 김준배씨(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의 후배 B씨(29)는 6일 저녁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김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의문사 규명위에 진정된 85건 의문사 사건 중 관련자가 직접 양심고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씨는 “한 형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2차례 정도 항응을 제공받는 등 여러차례 함께 술을 마셨다”며 “형사가 준배형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대가로 3천5백만원을 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수배중인 형이 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97년 9월 추석전 자신의 집에 와 있노라는 후배 B씨의 말을 듣고 광주 북구 오치동 B씨의 아파트에 머물다 경찰의 포위를 당했다.

김씨는 아파트 외벽 케이בל선을 타고 달아나다가 3층 아래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후 경찰의 구타를 당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기자 bravo@kyunghyang.com

### 의문사 관련자 첫 양심선언

김준배씨 후배 경찰제보 고백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지난 97년 의문의 추락사 당시 경찰 구타사실이 밝혀진 김준배(당시 26·한총련 투쟁국장)씨의 후배 B(29)씨는 6일 저녁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학원 프락치'로 활동하며 김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B씨는 “한 형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2차례 정도 항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형사가 준배형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대가로 3,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배중인 형이 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의문사 규명위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중 관련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고백을 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조현석기자 hyun68@kdaily.com

### 진상규명위에 맞서는 검사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5일 지난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감사였던 정모 검사(현 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 검사가 불응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은, 정 검사가 사건 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하고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다. 정 검사는 “당시 부검결과 추락사로 나왔고 폭행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씨 사망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화와 서면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 검사에게 사건의 은폐, 축소 의도가 있었다면 범인은닉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가 대통령직속 특별위의 동행명령에 이처럼 버틸 수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에 강제소환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정 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관련 법제정 당시 대다수 언론은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강제소환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장준하(張俊河)선생 의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타살 가능성에 대한 심증만 굳혔을 뿐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협조 때문이다. 엄혹한 독재정권 시기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결국 중동무이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정 검사는 이제라도 위원회에 나와서 김씨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옳다.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검찰지청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 의문사 김준배씨 '프락치 공작' 후배 양심선언

## “경찰 협조하면 3500만원 제의...죽을 죄졌다”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악몽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프락치'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97년 의문사한 김준배(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씨의 후배 전모(29)씨가 지난 6일 학원 프락치 공작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

양심선언을 하기로 한 이날 오후 8시15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는 긴장감마저 들었다. 김씨의 아버지 김현국(66)씨는 연신 담배를 피우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4년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인을 밝혀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당시 프락치 공작에 가담했던 후배 전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개를 떨구고 민변 사무실에 들어선 전씨는 8시30분께 '준배형 그리고 아버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담담히 읽어갔다.

“준배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듯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지난 과오를 잊어버릴려고 매일 술도 마셔봤고, 극한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군 전씨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김씨를 죽임으로 몰아간 프락치 활동의 동기를 설명했다.

지난 97년 7~8월께 대학 선배 C씨에게 A씨를 소개 받은 전씨. 나중에 A씨가 경찰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별다른 거부감없이 만남을

계속하다 C씨를 통해 프락치 제의를 받았다.

“준배형이 수배생활을 청산, 새 생활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협조하면 경찰이 3500만원의 돈을 줄 것이라는 C선배의 얘기도 있어서...”

아버지 김씨는 “준배가 3000만

원짜리 밖에 안되니까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을 때는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전씨는 “두차례 정도 단란주점에서 접대를 받았고 여러차례 술접대를 받았지만 돈을 받은 일은 없다”며 “구치소에서 1개월을 지내고 출소한 뒤 A씨가 20만~30만원을 건넨 적은 있다”고 했다.

전씨의 수사를 책임졌던 정윤기(현 영월지청장) 검사가 프락치 사실을 알았다는 김씨의 질문이 있었지만 전씨는 말을 흐렸다. 영월지청에 항의를 갔던 시민단체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것도 이때였다.

전씨의 양심선언은 정검사의 프락치 사전 인지 여부, 3500만원이라는 거액의 횡령 등 핵심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채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함께 했던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민변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군요”라는 자조섞인 한마디를 던지며 하나, 둘 자리를 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지난 97년 의문사한 김준배씨 사건과 관련, 김씨의 후배 전모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자신이 학원 프락치였음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김형태 변호사

# 어떤 악연

정윤기 검사

###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번엔 의문死사건으로...

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별검사보가 바로 김 변호사. 김 변호사는 "1차 수사대상은 대검 공안부"라며 '칼끝'을 겨누던 이 부서 관계자들을 소환했으며 정 검사는 졸지에 '피조사인'이 됐다. 그후 김 변호사는 본업에 복귀했으며 정 검사는 수원지검 공안부를 거쳐 영월지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들의 첫 만남은 1999년 10월에 이뤄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를 거쳐 대검 공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정 검사는 대검 공안부의 파업유도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특

이들의 악연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일해 오던 김 변호사가 지난 3일 김준배씨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찰의 구타사실 및 검사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사건지휘 검사인 정 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특검 때와 달리 이번에는 김 변호사도 정 검사의 출두를 강제할 '무기'가 없는 상황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준배씨 사망사건 담당검사에

# 민변 “조사 협조”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당시 수사지휘 검사였던 정윤기(鄭倫基) 현 영월지청장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의 부도덕성 또는 불법성과 의도적인

은폐 및 축소하였는 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담당검사로써 조사요청에 불응하는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이에 앞서 위원회가 지난 3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추락사가 분명한 사건으로, 현지 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위원회측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소환불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 기타 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 의문사사건 단순사고사로 첫 종결

(서울=연합뉴스) 이상현기자 =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발족 6개월만에 타살의혹이 있다고 진정접수된 의문사 사건중 한 건을 단순사고사로 첫 종결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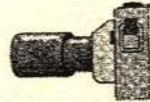
의문사진상규명위는 3일 유족들이 정부기관원에 의해 82년 타살됐다고 문제제기한 당시 K대생 신모씨(1961년생)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을 벌인 결과, 민주화관련성 및 공권력 개입은 물론 타살의혹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추락사고사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K대 건축학부 2학년에 재학중이던 82년 3월12일 군입대 친구의 송별회에 참석한 뒤 그날 밤 서울 잠실 근처 삼성교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당시 신씨 사망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발을 헛디뎠 실족한 단순사고사였으며 타살혐의는 발견치 못했다'며 '정부기관원이 신씨를 미행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끝)

# Zoom-in



발족 6개월만에 1건 처리... 의문사규명특 양승규 위원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 6개월 반 만에 한 대학생의 의문사를 과거 수사 결론대로 단순 사고사로 판명한 단 한 건의 실적(実績)을 냈다. 마감 시한인 10월 안에 접수된 83건의 의문사에 대해 모두 결론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양승규(梁承圭·67) 위원장은 "주어진 기한 내 모든 걸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 1건 당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수사관 1~2명이 몇 달



Q: 의문사 1건당 비용 5000만원?

A: 20~30년 전 일이라서 수사 쉽지 않다

Q: 타살 밝혀지면 소급처벌하나?

A: 국제법상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 없어

씩 매달리고 있는 셈인데(전체 48억원의 예산과 95명의 인력)?

"대부분 20~3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쉽지 않다.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 검찰은 소환할 수 있지만 우리 수사관들은 직접 관련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관련자들이 증언에 불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

-수사관들은 검·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에서 파견 나와있다. 의문사와 관련된 조사 대상 기관 공무원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기우이다.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제보나 양심선언은 있는가?

"좀 있긴 하지만..., 사건 해결이 이뤄진 뒤 밝혀졌다."

-얼마 전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현장에 대해 항공촬영을 했다. 실족사인가 타살인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어느 쪽으로든 규명이 될 것이다."

-어떤 의문사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를 15년의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소급 처벌할 것인가?

"국제법상 반(反)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崔普植기자 congchi@chosun.com

# 의문사 진상규명 지지부진

## 83건 조사 중간점검

70, 80년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 등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지난해 10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의문사 진정사건 78건과 직권조사 5건(제보사건 2, 옥중사망사건 2, 삼청교육대 사망사건 1) 등 총 83건을 조사중이다.

## 아직 1건도 진상 못밝혀

위원회는 그동안 재야지도자 장준하(張俊河)선생이 70년대 중반 등반도중 변신체로 발견된 경기 포천군 이동면 소재 약사봉에 대한 항공촬영을 실시했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崔鍾吉) 전 서울대 법대교수의 동생(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으로부터 증언을 듣기도 했다.

조사관 53명이 거의 6개월간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의문사의 진상이 밝혀진 것은 한 건도 없는 상태.

다만 국가 기관원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한 당시 대학생인 신영수씨는 사고사로 판명됐고,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박태순씨는 행려사망자로 변사처리된 것이 확인돼 공권력의 개입여부를 조사중이다. 또한 배중순씨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조사가 중지됐다.

조사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의문사의 대부분이 70, 80

##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상황

2000년 10월 20일 ~ 12월 31일
의문사 사건 접수 진정사건 78건 직권조사 5건 등 총 83건 현재 조사 진행중
2001년 6월 15일 ~ 7월 15일
1차 조사기간(6개월)만료 조사 미진한 사건은 37건간 연장
1차 연장후 여전히 조사 미진한 사건의 경우 3개월간 조사기간 연장 위원 발령 추진

년대에 일어나 증거 자료가 없어 지거나 훼손된 데다 사건 관련자나 목격자들이 제대로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

더구나 참고인의 불출석 및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조사기간도 모두 9개월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자의 제보와 양심선언을 유도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결정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5000만원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의문사와 관련한 죄가 있더라도 자수하면 형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허위진술 처벌 법개정 추진

위원회는 또 조사기간 3개월 연장과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및 허위진술시 형사처벌 등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청산을 위한 의문사 진상규명작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의문사 진상규명 협조” 대통령 지시 불구

# 공안기관 ‘무성의’ 여전

자료요청에 “폐기했다” “내사사실 없다” 일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의 활동이 관계기관들의 비협조 등으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규명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에도 관련기관들이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양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지시 뒤에도 수십건에 이르는 자료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공안기관이 ‘이미 폐기했다’, ‘내사사실이 없다’는 답신을 보내고 있다”며 “10건 중 9건이 조사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밝혔다.

실제 위원회는 1984년 군 복무 중 총기사고로 사망한 한 대학생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국군기무사에 ‘사망자에 대한 사찰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기무사쪽은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문을 보내달라”는 회신만 보냈다.

위원회는 또 국정원쪽에 의문사한 시국관련 인물에 대한 내사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보존연한(15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짧막하게 답신하는 데 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20~30년 전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하기가 어려운 만큼 관련 자료 일체를 보내주면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기관들은 ‘보여주기 싫다’는 말을 ‘자료가 없다’로 대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인물에 대한 동향보고 등 정보기관의 내사자료는 진실을 밝힐 핵심고리”라며 “이런 내사자료가 아직도 국정원과 기무사 등에 남아 있을텐데도 협조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수사 및 정보기관 전·현직 요원들의 진술 거부 및 허위진술 △일부 정부 과건 조사관들의 ‘태입’ 행위 △짧은 조사기한(6개월) 등도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위원회쪽은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20일 성명을 내어 “양심선언자에게 사면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바로잡습니다

▷21일치 14면 ‘의문사 진상규명 공안기관 비협조 일관’ 기사에서 ‘국정원은 보존연한 15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답신했다’는 부분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의 잘못입니다. 또 ‘일부 정부 과건 조사관들의 ‘태입’ 행위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의문사규명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 “의문사 규명위에 수사권 부여를”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세기 과거청산과 NGO’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인권평화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과거청산 전망 및 특별법 제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kdaily.com

명 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의 확립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통한 교육활동과 정부 스스로 인권평화재단 등의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부 스스로도 조사 나서야

●특별법 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김삼웅 대한매일 주필)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지 못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국정원·검찰·경찰·기무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50명도 안되는 조사관들이 20~30년 전의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조사인력을 늘리고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을 통해 국가테러리즘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 반세기 전 반민족행위자를 끝내 처벌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만큼 진실의 규명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적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토론회(양미경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과거청산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아주 부족하다. 과거청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은 이제 국내·외 연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특별법의 통합도 고려해볼만하다.

## 숨겨진 피해자 구제 길 없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피해(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청정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 4·3항쟁 등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특별법은 진상규

표의 부족, 국가폭력이 공안기관 등을 통해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돼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조사를 위한 권한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과 고문 등 피해자에 대한 규명으로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과 철저성에 문제가 있다.

●인권문제 전후 민간인 학살의 피해(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청정 당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제주 4·3항쟁 등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특별법은 진상규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는 성공회대 김동훈 인권평화센터소장, 4·3법국민위 법률특위 김순태 위원장,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장원익 공동대표, 부산대 김창록 교수, 문경양민학살유족회 채익진 회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나섰다.

●인동훈기자 sunstory@kdaily.com

대한매일신보사와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주인권국가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기는 취지로 공동 주최한 제3회 인권평화학술심포지엄이 2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세기 과거청산과 NGO’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민길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과거청산이 이뤄지려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권법, 5·16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우리의 단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과거청산운동과 NGO’, 2부 ‘미해결 과제들과 정부, NGO’, 3부 ‘특별법 제정 및 개정운동의 한계와 과거청산의 전망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의 주요 발제문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 ‘20세기 과거청산과 NGO’ 본사·성공회대 인권센터 심포지엄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현황과 과제(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황인성 사무국장) 위원회는 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독재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진실위원회 방식에다 사법처리를 통한 정의의 확립을 집목시킨 한국적 과거청산 모형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역사속에 묻혀 당시 현상이 부재한데다 자

### "의문사 확인불가 국정원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의문사 확인요청 공문을 받은 정부 관련기관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확인불가'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보낸 의문사 확인요청 공문 65건중 38.5%인 25건이나 '확인불가' 답변을 했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답변비율은 기무사(26.7%), 검찰(17.3%), 경찰(10%) 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현행 특별법에 ▲참고인의 진술의무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일 현재까지 진정 또는 직권조사 대상 의문사 83건 중 2건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shchon@yna.co.kr

(끝)

## 일부 의혹 실체 접근 성과

### ■ 의문사규명위 중간점검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奎)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84년 삼청교육대 집단난동의 주범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의 집단폭행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내는 등 일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다.

김형태(金亨泰 변호사)상임위원은 "접수된 81건중 절반 정도는 상당 부분 조사가 진척됐다"고 말했다.

73년 안기부에서 숨진 서울대 최중길(崔鍾吉)교수와 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장준하(張俊河)씨 사건에서도 타살로 추정되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운동권의 이내창·이철규씨 사건도 수사관들을 투입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소환권·기소권이 없는 데다 국

정원·기무사·경찰청 등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1차 조사기한 연장도 3개월에 지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혐의자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어도 보완도 필요하다.

### 주요 사건 진행과정

이름	사건개요	수사발표	조사결과
박태순 (27·노동운동가)	92년 시흥역 철로에서 범사체로 발견	신원확인 불가 농. 기계장	신원확인됨에 따라 99년화장품, 피살여부는 미확인
신영수 (21·건국대생)	82년 서울 삼선교에서 범사체로 발견	단순 사고사 처리	단순 사고사 결론
박영두 (29·직장인)	80년 단순 폭력으로 삼청교육대 입소,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사망	심장이비 사망	교도관들의 집단구타로 사망
장준하 (56·언론인)	75년 포천 약사봉에서 범사체 발견	단순 실족사	타살로 추정되는 일부 정황 확보

### 장준하씨등 타살 추정 증언 확보

### 수사·기소권등 없어 활동에 한계

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활동기한 3~6개월 연장 ▲조사 불응자 과태료 부과 ▲위증자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복삼기자

youngtan@kdaily.com



# 타살 드러나는 의문사 많다

## 진상규명위, 83건중 절반 조사 진척 ... 배후 규명이 관건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 가량이 사인 과 사고 경위와 관련,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져 실제적 진상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김형태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접수된 83건의 의문사 가운데 단순 변사로 종결되거나 진정인이 취하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중 절반 정도는 조사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들 사건을 조사한지 4~5개월이 지나 가까운 시일 내에 타살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는 사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사건은 의문사 1호로 꼽히는 고 최종길 교수(서울대 법대) 사망 사건.

73년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끌려가 변사체로 발견된 최 교수 사건은 의문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동생 최 종선씨(56)가 올 3월 귀국,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동생 종선씨는 "형이 자살했다고 발표한 당시 중앙정보부의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종선씨는 그 근거로 △88년 최 교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안기부가 제시한 몇장의 투신 현장 사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장현(66)씨가 최근

"무장경비원 없이 수사관만 화장실까지 따라갔다는 발표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힌 대목,

마지막으로 △ 최교수가 사망했다는 10월 19일 새벽 소위 투신 현장에 도착했던 이병정 중령 감찰과장이 88년 재조사때 "이미 현장엔 시체도 핏자국도 없었고 이를 물로 씻어낸 흔적도 없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밝힌 증언.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 증언이 신빙성이 높은 주장이라고 보고 관련증언 및 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유신 독재시절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고 장준하 선생이 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도 단순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됐다는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올 4월 장 선생이 의문의 실족사를 당한 약사봉 일대에 대한 항공 촬영을 통해 의문사 지점 실사 모형을 제작,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추락한 암벽 사이에 과연 당시 경찰 주장대로 단순 실족사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또 △사고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한 지 여부 △유족들 주장대로 경사 70도에 높이 14m인 암벽에서 추락한 시신에 끈질이 전혀 없을 수 있는지 여부 △시신 발견 지점과 추락 암벽 사이 실족사 개연성 등을 과학적으로 실측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장 선생의 실족사 사고 당시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김 모씨(76)를 소환, 약사봉 현장에서 실지 조사를 벌여 장 선생이 점심을 먹었다는 지점과 실족한 계곡, 군인 2명이 텐트를 쳤다는 곳

### · 사회복지

## 의문사규명위 조사기간 연장 7건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2일 최종길 교수 사건을 비롯한 진정사건 7건에 대해 조사기한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 후 6개월내 조사를 마무리하되 기한이 경과하면 필요시 대통령 보고 후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3년 당시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에서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법대교수 사건의 경우 실제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지만 참고인 조사등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해 조사기한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총83건의 사건중 2건은 진정인의 진정취하나 단순 사고사로 종결처리했으며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sungjin@yna.co.kr (끝)

### 김대통령 '개혁3법' 위원들 격려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혁3법 위원회 위원 36명을 만난 것은 이들 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혁3법 위원회는 모두 김대중 정부 들어서 구성됐으며, 민주주의·인권 신장의 상징으로 현정부가 꼽는 것들이다. 접견 시간도 1시간 남짓으로 웬만한 대통령 행사보다 길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민주화 시절 의문사 등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강한 어조로 위원회 활동을 격려했다. 그는 5공 초 사형선고를 받았던 경험을 보기로 들며 "우리는 과거에 박해를 받았지

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신념을 갖고 살았다. 여러분들을 만나니 새삼스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실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고 가능한 보상을 하자는 것은 누구에게 보복을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당연한 성의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의 감춰진 사실을 파헤치려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접견엔 정 부기관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 83건 접수...6개월간 4건 종결

## 가해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결과 안될는지

### 막대한 진실...의문사규명 어디까지

①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법률 제6170호 신규제정 2000.01.15) 제1조의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 간 넋을 달래고 '역사적 진실 찾기'에 나설 것이라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말 현재 이렇다 할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이렇다 진실이 은폐된 과거사에 대해 되레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난 70~9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끌려가거나 혹은 강제징집되고 행방불명된 인사 가운데 일부는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진상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채 자살로 판정. 한뼘한 유가족들의 가슴을 괴롭혔다.

유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난 98년 11월4일부터 99년 12월30일까지 422일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에앞서 지난 88년 135일간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농성과 94년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유가족들의 한뼘한 절규로 마침내 2000년 1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노동·인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23명, 검찰·경찰·군·국정원 등 수사분야 공무원 27명 등 50명의 조사관과 장관급인 위원장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곳에 지난 1월까지 83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지만 진정을 취소한 배중순씨 사건, 단순사고사로 판명된 신영수씨 사건 등 24일 현재까지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종결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진상규명위는 최

### 장준하 선생 등 수사도 '타살의혹'에 그쳐 진상규명위 "기간·인력 부족에 고충"

종길 교수 사건 등 7건의 조사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키로 했으며 1차조사기한이 만료되는 대부분의 사건을 3개월 더 연장,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별법은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한후 6개월내 조사를 마무리하되 기한이 경과하면 필요시 대통령 보고후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3건의 의문사 가운데 관심의



지난 99년 10월 유가족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하는 모습. /이정민 기자 imlee@laborw.com

초점은 타살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준하 선생 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에 모아지고 있다.

이외관련 진상규명위 양위원장은 지난 12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 "장준하 선생은 타살 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최종길 교수도 억울하

다. 이에따라 진상규명위는 최

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며 타살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양사릉에서 등산 중 의문사 했던 장선생 사건의 경우 지난달 31일 당시 관 계였던 인물전원을 불러 현장조사한 결과, 장선생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실족사 가능성이 희박한 곳이란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최교수 사건의 경우, 당시 중정 직원이었던 최교수의 동생이 지난 3월 타살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긴 수기집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종결한 사건이 4건에 불과하고 대표적 의문사에 대해서도 이처럼 타살 의혹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이렇다 진실은 영원히 가려진 채 가해자들에게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황인성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전체 사건의 수사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당 조사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사기간과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수사종결 이전에도 중간조사진행사항을 발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rw.com

#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막무인집십...의문사규명 어디까지

- ② 벽으로 둘러싸인 규명작업 -

"정보·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태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지난 7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더 큰 조사권 한과 조사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한 진상규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전·현직 종사자들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규정 등을 내세워 조사나 진술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개시 후 관련기관들의 공식답변 내용(5월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65건의 확인요청 공문 중 38.5%인 25건에 대해 '확인불가'로 답변, 가장 무성 의한 태도를 보였다.

또 기무사는 15건 가운데 26.7%인 4건을 '확인불가'로 답했으며 검찰은 52건 가운데 9건(17.3%), 경찰은 234건 중 27건(9.9%)에 대해 '확인불가'로 답했다. 이처럼 관련기관들의 비협조 행태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위에 조사권, 소환권 등 실

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5일 발표된 박영두씨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 2명이 현직 공무원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 원천적으로

반드시 처벌, 다시는 역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9개월 안에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80여건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해야 하는 진상규명위 입장에서는 수사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관련 진상규명위는 수사기간 3개월 연장을 뼈대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은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내년 2월로 활동이 마무리

## 관련기관 비협조 ➡ 실질 권한 확대 공소시효 ➡ 반인도적 범죄는 예외규정 진술거부 ➡ 처벌규정 있어야 짧은 조사기간 ➡ 상설 기구로 전환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이 위증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서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참고인의 진술의무 조항 신설과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공소시효 정지규정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도 "의문사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거짓진술과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되는 진상규명위를 상설 정부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함께 진상규명위가 5·18 민간인 암매장 사건의 직권조사를 거부한 점과 박영두씨의 민주화 운동 인정을 5대4로 간신히 통과시킨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목표로 내건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진상규명위 활동에 있어 외부의 저항과 비협조 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직된 사고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7일 청와대에서 양승규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을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정부기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

# 실질 권한 확대로 '용두사미' 막아야

## 막무인집십...의문사규명 어디까지

- ③ 외국 사례에서 배울 점 -

"과거청산은 진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화해가 목적인데, 진실이 없다면 화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7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한 주한 칠레대사인 슈미트 대사는 이렇게 당부했다.

칠레는 지난 70~80년대 독재정권인 피노체트 치하에서 일어난 3400여건의 민주인사 사망·실종 사건과 관련, 9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의문사에 대한 역사적 진실찾기에 나선 바 있다.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역사적 단죄에 나섰던 칠레와는 달리 아르헨티나는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시종착오를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83년 문민정부인 알폰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 민주인사 3만여명의 실종사건과 관련, 대통령 직속 '전국실종자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독재의 저항과 조사권, 소환권 등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규명작업은 한계에 직면했고 89년 메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대부분의 군인을 사면,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과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정책으로 전세계적인 비난을 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한 94년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구성, 의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만1300여건의 TRC 조사는 정치인과 관료, 언론인, 목회자 등 6800명의 가해자가 자진출

의 경우 열쇠적인 조사로 인한 갈등과 사회통합 문제가 제기됐고, 조사권·소환권이 없는 상황에서 '용두사미'로 끝난 아르헨티나의 규명작업은 국내 진상규명위 활동에 대한 일부의 우려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

특히 진상규명위가 5·18 민간인 학살 희생자인 박병현씨 사건의 직권조사를 포기하고, 또 청송고도소 박영두씨 사건을 민주화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부진통은 일부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최근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진상규명위에 합류한 인사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이 하나씩 벗겨진다는 의미

## 아르헨티나, 조사·소환권 없어 한계 직면 규명위 내부의 경직된 사고도 경계해야

두하는 대장정이었지만 "진실은 있었지만 화해는 없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당시 TRC의 위원장을 맡았던 루투 고는 백인들의 인권탄압 뿐만 아니라 만델라가 총재로 있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저항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민간인 살해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쳤기 때문이다.

남아공, 아르헨티나, 칠레 등 제3세계 국가에서 진행됐던 의문사 규명작업은 우리나라 진상규명위 활동에도 적용은 시점을 면제하고 있다. 남아공

를 세삼스레 되새겨야 한다"는 민주·재야단체 인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진상규명위 양승규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인사말을 통해 명백하지만 빠이는 의미가 담긴 한마디를 던졌다.

"저희는 역사적 정의를 위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의 결실을 때문에 가해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용두사미'는 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류정민 기자

dongack@labow.com

# “역사 진실 찾기로 과거와 화해해야죠”

시민의시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

“풀리지 않는 사인이 독재권력의 폭압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지요.”

대통령직속기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양승규 위원장의 말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소사는 이렇다. 노태우 정권시절인 88년 10월 17일부터 유가족의 135일간의 농성, 김영삼 정권시절인 94년 10만 명 서명을 청부한 입법청원과 98년 422일간 국회 앞 농성이 이어졌다. 그 후 99년 8월 2일 민주당 이상수 의원을 비롯한 155명의 의원이 특별법으로 발의를 했으며,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지난해 1월 드디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과 압수수색권 등이 없어 이미 조직의 자기한계를 갖고 출발하였고, 그래서 의문사진상규명에 대한 진실 찾기는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83건 중 1건은 민주화관련 타살로 인정(박영두 사건), 2건은 기각, 1건은 진정취하하는 등 4건을 종결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맞

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검찰이나 사법부의 조사활동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양 위원장은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 진실은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되어져 하기 때문에, 간혹 유가족분들의 이해나 요구에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대해 양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 기구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등의 제도

## ‘박영두 사건’ 타살 규명, 남은 79건 조사 중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한시적 기구로서 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위원장은 반민특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반민특위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풀 다 ‘과거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독립국가가 된 후 친일파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가해자를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화해·협력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 정서는 특별법 제 33조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지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이승만의 친일 아류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출범한 것이라면, 진상규명위원회는 희생

회하는 ‘박영두 사건’을 조사 발표했다. 박씨는 84년 10월 ‘보호감호 철폐’와 ‘교도관의 폭행 근절’ 등을 요구하다가 12일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13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그간 재소자의 권리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개인의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맥락 속에 규정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도 반성은 커녕 진술조차 거부하는 교도관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영두 의문사 사건, 가해자 규명대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진상규명위원

된 유가족의 절기농성과 집회를 통한 결과물로 출범한 것입니다.”

양 위원장은 “70년대 발효된 국제 조약에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의 공소시효 부작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이나 양민화살문제 해결과 관련한 역사청산에도 중요한 함의를 주는 조항입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진상규명위원



〈양승규 기자〉

회하는 ‘박영두 사건’을 조사 발표했다. 박씨는 84년 10월 ‘보호감호 철폐’와 ‘교도관의 폭행 근절’ 등을 요구하다가 12일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13일 사망했다. 이 사건은 그간 재소자의 권리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개인의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맥락 속에 규정하였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은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고도 반성은 커녕 진술조차 거부하는 교도관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에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영두 의문사 사건, 가해자 규명대회’를 가졌다.

(장성순 기자 fountainjss@naver.com)

# 의문사 규명委 심각한 내분

수사기관·민간인 출신  
조사결과 싸고 대립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양승규·梁承圭) 내에서 수사기관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들과 민간 조사관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검·경 출신 파견 조사관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공채된 민간 조사관들은 지난달 18일에서 21일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상대방의 조사 태도를 비판하면서 서로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대립 분위기를 보였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전했다.

이들의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자 양승규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월례 조희석상에서 “일부 조사팀에서 서로 갈등을 심화시키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직접 경고했다.

양승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전체 조직에 경계를 주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서 “위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崔有植기자 finder@chosun.com

# 관련기관 비협조... 내부 불협화음... 유가족 불만 의문사규명위 안팎 시련

## 수사권 확대 등 보완책 따라야

활동시한을 7개월 남짓 남겨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안팎의 난관으로 고전하고 있다. 한 의문사 유가족이 진상규명에 뚜렷한 진전이 없자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가족들의 항의가 거센데다 내부의 견해차까지 불거지고 있다.

1983년 5월 보안사에서 조사받다 의문사한 이윤성(사망 당시 21살)씨의 유가족들은 28일 "의문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9일 서울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박정관(47)씨는 "사건 접수 철회까지 고려했지만, 규명위의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

선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명위에 의문사를 접수한 많은 유가족들은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 방향과 방법이 유가족들의 생각과 현저히 다르다"며 "규명위의 조직쇄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가한 한 유족은 "유명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의문사에는 신경을 덜 쓰는 등 죽음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을 밝히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간 조사관과 정부과건 조사관들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문제도 여전하다. '최종길 교수 명예회복대책위'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일부 조사관이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고, 언론이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조

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체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규명위는 지금까지 조사대상 85건 가운데 3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성과'로 평가받는 것은 청송교도소에서 구타를 당해 숨진 박영두씨 사건 뿐이다.

진상규명에 최근 진척을 보이고 있는 몇몇 사건도 고위 공무원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관련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화정신계승 국민연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가 보안유지만 강조할 게 아니라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고, 제재추적권과 압수수색권 등 수사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 ● 시민사회 ●

## “기대는 높고, 의문은 깊고...”

### 의문사진상규명위 출범 8개월

최경석 본지 기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 8개월째, 83건의 의문사를 조사하고 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은 안방한다. 9개월이라는 조사시한 중 벌써 절반을 훌쩍 넘긴 사건이 많지만 별다른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 활동이 난관에 봉착했다. 작년 12월 2일 첫 조사를 개시한 사건들 중 일부가 다 음달이면 1차로 끝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발표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92년 8월 행방불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가 신원불명의 행려사망자로 처리돼 화장된 사실을 밝힌 것과 82년 3월 변사체로 발견된 건국대생 신영수 씨가 단순사 고사였다는 것을 밝힌 것, 이 두 가지가 전부다. 6월이면 1차조사가 끝나는 것이 8건이고 7월이면 대다수 진정 접수건의 1차조사가 끝나야 한다. 따라서 조사 연장 3개월을 고려해도 지금쯤이면 중간발표라도 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진상위는 위에서 언급한 2건 외에는 여타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일종의 침묵이 내린 상태이다. 직접 진상위에 찾아가 봐도 일선 조사관에서 위원까지 모두들 매우 공식적인 발언 외에는 말하기를 꺼렸다. 온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너무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진상위의 조사 과정 자체도 일반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의문사 조사의 역사적 의미는 어느 정도 보도했지만 조사과정과 결과가 빠져

한줄 꺾인 모습이다. 오히려 돈과 시간만 축내는 것은 아니냐는 흠집 내기 식 보도가 일부 보수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기간연장, 기득권의 저항, 자료부실의 문제 드러나

우선 진상위의 조사현황부터 알아보자. 현재 조사중인 것은 81건이다. 작년 11월 9일에서 올해 1월 5일까지 진정인에 의해 접수된 것은 80건. 이 중 2건이 각하되었다.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남민진, 인혁당, 삼정교육대를 조사한 것이 5건으로 총 83건이 조사 진행중이다. 그 중 1건은 진정인이 취하했고, 나머지 1건은 신영수 씨의 경우로, 이것이 종결됨으로써 현재 81건이 남은 것이다.

황인성 진상위 사무국장은 "현재는 대부분 파진정인에 대한 조사로 넘어간 단계"라며 "진척되는 정도로 봐서는 7월 중순쯤에 8건 정도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조사단서가 될 만한 것으로 5-6건의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사건의 윤곽이 잡힌 것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더딘 진행과정과 함께 진상위가 실제 일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벽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 사건 자체가 말 그대로 '의문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개별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곳에서 사망했고,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난데다 현장보존이나 당시 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온밀성과 개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측면과 물리적인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그런 이유와 더불어 1차 수사기관이 결과를 발표한 터라 더욱 엄정한 고순도의 조사를 요구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애초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위를 꾸리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도 하다.

먼저 조사기간의 연장 여부가 걸려 있다. 현재로는 조사기간이 길어야 9개월. 이처럼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경우도 처음 18개월 예정에서 2년 10개월로 연장되었다. 김형태 진상위 상임위원은 "3개월 연장이 위원회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후 "그렇지만 우선 정해진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직접 조사를 맡고 있는 일선 조사관들은 이보다 더 연장해



출범한 지 8개월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공식적인 결과발표를 한 달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서울역 앞에서 자식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

주기를 원하고 있다. 특별조사과 행정덕 조사관은 "각 건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종결시키고 싶다"며 "이를 위해 기존 안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조사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윤희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 진상규명 사업국장은 "기간은 최대한 연장됐으면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수사권한도 함께 가져야 '기간만 연장하고 세금만 쓰는 식'이라는 방해세력의 흠집내기를 막고 내실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의 저항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전 국가기관에서 일했던 이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임을 알고 있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태 상임위원은 "참고인이나 피진정인 일부는 외국으로 나간다가나 불려도 오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꼭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한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로 데려와도 진실을 얘기해야 해질되는 부분이고, 그런 증인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단, 출석을 안 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허위진술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사권에는 진상위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규정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행정덕 조사관은 "조사 도중 국가기관 출신의 참고인이나 피진정인은 우리에게 수사권한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으므로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사를 위해 다시 동행을 요구해도 거부하기 일쑤라는 것.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현재로는 부과제가 불분명한 상태라 어렵다고 한다. 그는 "과태료는 현재 절차상 시행령이 미비해서 직접 부가가 어려운 상태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물적 증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군, 경찰을 비롯한 기관의 비협조도 실제 조사에 들어가면서 문제로 드러났다. 황인성 사무국

장은 "각 기관에 자료요청을 하면 형식적인 자료만 보내거나 보존기한이 지나서 파기했다는 통보만 온다"며 "그 기관들에 전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동호 조사관은 "경찰의 경우 기록보존이 10년이므로 수사에 난항을 겪는다"며 "참고인 조사는 거의 개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유가족들이 모아둔 사본을 오히려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진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일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남아공과 같이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속에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밝히면 우리 사회에서 소위 '왕따'가 되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줄 것 같아 꺼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동호 조사관은 "가해자 측의 제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회적 매장이 두려울 것이며 동료집단의 따돌림, 개인적인 불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태 위원장은 "과거청산이 명확해야 현재와 미래에 건설적인 제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인 공감대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전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진상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 정윤희 국민연대 진상규명 사업국장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받아보고 있지 못하다", "조사과정의 중간발표가 있어야 하며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진상위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판정이 났다고 해도 진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사고사로 판정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공권력 개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 경위와 배경을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정 국장은 "진상위의 활동이 잘못되고 있다고만 보는 것은 아니"라며 "분명한 성과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더욱 공개를 해서 진상위 스스로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 87년 강원도 모 시단에서 아들 최우혁군이 의문사했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최봉규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39일째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1988년 12월 13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최씨처럼 의문사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한을 무릅쓰는 422일간의 투쟁 끝에 제정된 것이다.

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들은 양심적인 제보자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고백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과거 정권의 도덕성과 공권력에 대한 존재가치 부정, 관계자 처벌 요구 등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규 위원장의 직무실 앞에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는 성경 구절이 새겨진 팻말이 걸려 있다. 이 팻말이 상징하듯 진상규명위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真相)을 밝히고 피해상황, 발생 원인, 사건 예방이나 진상규명을 하

# 의문사, 드러나는 진실들

진상규명위원회 '진실 찾기 7개월'  
양심적 제보·관련자 고백 등으로 조사 활기

김용삼 주간조선 기자(yskim@chosun.com)

**대**통령 직속 의문사(疑問死)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梁承圭)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92년 3월 12일 서울 잠실 근처 삼성고 밑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건국대생 신영수씨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의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알려졌기 때문. '조사 종료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어긴 셈이 되어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결과대로 단순 사고사(事故死)로 판명됐다.

총 82건에 달하는 의문사 사건을 조사 중인 이 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 끝에 밝혀낸 것은 신영수씨 사건과, 지난 92년 8월 행방불명됐던 노동운동가 박대순씨가 신원불명의 행려 사망

자로 처리돼 화장(火葬)된 사실 등 두 건이다. 이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위원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미흡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미리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을 뿐 진상규명 작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힘없는 조사관들이 힘센 권력기관 상대**

노동운동가 출신인 황인성(黃寅性)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자살 혹은 사고사였다는 과거의 수사결과가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타살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여러 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가해자들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과거의 수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은 사건" 들은 수십 건에 이

지 못한 이유 등을 밝히는 것이 주업무다. 50명의 조사관은 노동·인권분야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 관계자 23명과 검찰·경찰·군(軍)·국정원에서 10년 이상 수사분야에 종사한 공무원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두 세명이 한 조를 이루어 평균 3~4건을 담당하고 있다.

양 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 소환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관들이 활동의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가정보원·기무사·경찰청 대공본실·검찰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형식적으로는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나 관련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국가기관원에 의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진상조사위는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며, 범죄 혐의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개인

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때문에 국가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 전·현직 종사자들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앞세워 조사나 진술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참다 못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만들어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검·경(檢·警)과 국정원, 기무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이제,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광섭씨

진상규명위가 다루는 사건은 10~30년 전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사건 현장은 이미 없어졌고 관련기록은 보존연한이 지나 파기됐거나 기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대부분. 관련인이나 참고인의 소재 파악도 어려워 관련자들의 제보나 양심선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의문사와 관련한 제보를 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양승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지난 89년 5월에 사망한 이철규씨 사건의 경우 '이철규 열사(烈士) 사인(死因)진상규명 대책위'가 진상규명위측 보상금과는 별도로 제보자나 양심선언자에게 5000만원을 더 지급키로 해 포상금 규모가 1억원으로 늘었다. 양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양심선언자가 여러명 나타나 진실 규명에 결정적 역

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양심이 살아 있구나 하는 희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끝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사례도 목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면 형 경감이나 면죄를 요청할 것이나, 거짓 진술로

일관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건은 공소시효(살인사건의 경우 15년)가 만료돼 현행법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 진상규명위는 공소시효가 남은 85년 이후 사건은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며, 85년 이전 사건은 법적 처벌과 관계없이 실제

적 진상규명에 전력한다는 입장이다. 안병욱(安秉旭)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진상규명위원)는 1996년 유엔인권소위(小委)가 발표한 '중대 인권침해법 불(不)처벌에 관한 보고서' 제28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는 항목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안 교수는 '의문사와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의'라는 논문에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

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 국가는 억압을 자행했던 과거를 묻어두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유념해야 하며,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에의 불신감 해소 기회

지난 20세기는 평화의 희생자가 전쟁의 희생자를 능가한 세기였다. 강성학(姜聲鶴) 고려대 교수는 이 시기에 직접적인 군사적전으로 3500만명의 사람이 죽은 반면 적어도 1억명 이상이 자국(自國)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고문과 탄압, 폭력, 수감, 정신적 학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상규명위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황인성 사무국장은 "이 단체의 역사적 의의는 공권력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반(反)인륜적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가해자를 용서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자살·사고사르 은폐됐던 일부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져 국가기관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의로운 죽음'으로 추앙받던 사건이 그렇지 못한 죽음으로 밝혀져 유가족과 추종자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끝내 제보자나 양심선언자가 나타나지 않아 '영구 미해결' 사건들도 생겨날 것이다. 양 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진상규명위 활동이 국가기관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치유책을 마련하는 화합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상처 안은 유가족들 오랜 투쟁의 결실

의문사 진상규명위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된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의문사의 상처를 안고 있는 유가족들의 오랜 투쟁 끝에 햇빛을 보게 됐다. 유가족들은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인 1988년 10월 17일부터 이듬해 2월 27일까지 135일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 후인 94년 11월 4일부터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자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98년 11월 4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 422일간 국회 앞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계속했다. 이런 압력에 밀려 99년 8월 2일 민주당 이상수(李相濬) 의원을 비롯한 155명이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 15일 법률 제6710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와 같이 헌정(憲政) 질서가 짓밟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6개월이며,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82건의 사건을 오는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한 내에 해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진상규명위는 여당에 활동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제의했다.

“나는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김광섭씨



박영두씨 타살의혹 20년만에 파헤쳐

'혐의가 벗겨지고, 질식사했다면? 강간살인.' '복사사라? 고혈압이나 심장병.' '정식사나 목졸쳐사라?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경우 '시체를 수습된 걸었다면? 여자가 지렁이 의해 남자를 삼킨 경우.' 시신은 많이 없다. 하지만 주검의 형태만 보고도 죽은자와 죽은자의 관계를 쉽게 알아내는 이가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김광섭씨(61). 최근 청송강호소의 연인 탄압에 항의하다 못매를 맞고 숨진 뒤 20여년 만에 민주화운동 경력이 인정된 박영두씨의 의문사 진상을 밝혀낸 주인공이다. 무려 2000여구의 송장을 만지며 국내시체 감식계의 1인자로 통했던 김씨는 66년 경찰에 들어와 32년6개월을 재직하다 영등포경찰서 형사반장으로 3년 전 정년퇴직할 때까지 강력계에서 근무했다. '송장박사' 김씨는 '무덤' '영매' 등 범상치 않은 별명이 그의 남다른 경력을 말해준다.

32년 강력계 외길... 3년전 정년퇴직

"시체를 보면 금방 죽음이 동화되지요." 사망시 자세와 위치, 몸에 난 상처, 쓰러져 있는 주변이 조원인지, 어떤 것들이 흩어져 있는지 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곧 사건의 정황과 마지막 영상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여의지 않을 때는 시체가 이송되는 영안실까지 쫓아가 송장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역사재, 소사재, 교사재, 목살재... 흉기 든 기 교용사고에 의한 파살 등 그 어떤 타살에도 유용기였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평생의 업이다.

그는 시신과 대화한다. "사체에 대해 애정을 갖고 천변을 보고, 천변을 듣고, 천변을 대달리던 실마리가 풀립니다. 죽은자가 저

는 이렇게 죽었어요 하고 말을 해주지요."

그래서 그가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미제사건은 한변도 없었다. 이는 흔한 위미활동이나 술은 일절 하지 않은 채 틈틈이 법의학 관련 서적을 읽으며 송장연구를 한 덕분이기도 하다. 그의 방엔 자살본, 살인의 열학, 법의감시학, 최신법의학 심리학 등으로 가득하다. 현장시신을 찍기 위한 개인 소장용 카메라도 수십개. 사진기자의 장비를 방불케하는 전문가용 카메라와 특수렌즈까지 보인다.

2천여구 시체감식 '주검에 답이있다'

피의자가 마음을 열고 자백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오전 2~4시. 사건이 해결되면 김씨는 담배 한 개비를 들고 경찰서 마당에 나가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면 피살자가 웃으며 지나가는 환영이 보인다. 김씨는 "꿈가요"라며 손을 흔들며 말한다. 그 순간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수천구의 사인을 해결한 덕분일까. 그를 덕분에 목숨도 건졌다. 최근의 일이었다. 장영에 걸려 사경을 헤메던 중 중 속에서 깊은 웃을 얻은 저승사자가 같이 가자고 그를 끌어당겼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지 자신이 해결해온 수천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나타나 그를 비추었다. 그러자 저승사자들이 쫓겨갔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체가 저를 살린 셈이지요."

그의 남은 바람은 이땅에 현장감시 경험



영화 '형사' 주인공에 전격 발탁

이 있는 이들로 구성된 강력사건 감시관제를 만드는 것. 수역감식을 모르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송장을 볼 줄 모르면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9월엔 크랭크인되는 스타일리시 휴먼드라마 '형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여성감독 제기복이 지난해 8월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해 각본·제작까지 맡은 1인 3역의 야심작이다.

이상숙기자 smite@sportsseoul.com



그림 그윽함

후보자 5백명 탈락 끝에 독자 찾았지만 사망... 시정정황을 떠나고 싶단... 편지 보고 전국 사찰 뒤지기...

'덥 차니 억 하고 후다라'는 허무니없는 사망원인을 발표했다가 진실이 드러나면서 87년 6월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군 고문사사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민주화를 부르짖다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열사' 등 중에서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의미있는 한 줄이 기록된 경우다.

# 단서만 있다면 무덤



들과 기쁨같은 같은 '시민운동가·수사관 커피' 이 어머니의 의문사 진상을 캐내고 있다. 경시청에서 나온 최상영(왼쪽)과 수사기반서 파견된 박아무개 조사관은 우수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흥원 기자

## 익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렇듯 움직인다 조사관 '투감스' 밀착취재

익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특별조사부의 박아무개 조사관(하·업무실) 요청으로 익명 제1과 정상명 조사관(하·위원)의 내에서 호흡이 잘 갖는 몸비로 평판이 높다. 언론사인 박 조사관은 모 수사기반에서 파견된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 반면 정 조사관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거쳐 지금은 경찰실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운동가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조사활동을 벌이는 케이스다.

## 공권력에 희생 유가족들 진정 사건 개요만으로 '어둠속' 해매 지금까지 해결된 것 4건밖에

직접사건. 이에서 발전된 악건의 활동과고는 의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30m 높이의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골절 등의 의상이 없고 '내상'만 입었으니 한 장소에서 살해된 채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두 조사관의 진상을 잡아준 목격자의 존재. 경찰 수사기록에 엿보기가 목격자로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 83건 중 배당된 사건 4건 '베테랑' 울초부터 활동 1건 해결... 신영수씨

가 본 일을 말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착상이 이들의 발길을 다시 자극했다. 결국 목격자의 미담을 찾아내 이들을 신세 사건의 실제적 진실에 다가서는 진술을 듣게 된다. 이 미담은 '어느날 남편이 다리를 건너던 창단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하더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 검·경 수사기록 오래된 과거 국정원 등 해당기관 '자료없음' 관련자 증언 통해서만 희망

10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수십 년 지난 의문사 사건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군이나 의문사의 관련해 국경선, 기부사, 경찰 등 해당 국가기관에 사실확인 요청을 해도 '보존연한 경과로 자료없기' 또는 '관련자료 없음' 회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사는 골짜기 난공무역이 된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찰떡궁합



조사관 구성 어떻게 하나... 사실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놓고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또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에 조사활동이 '나눠서' 효과도 적지 않다.

# 속도 들어갑니다

익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사관들은 모두 50명. 28명의 공무원과 22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들은 경찰청 등 국경선 등에서 파견된 베테랑 수사요원들이고 민간인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경험에 있어 조사관들과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 익문사 사건의 경우, 국가기반이 가해자이고 민주화 인사들이 피해자 일 경우 어떤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조력자. 게다가 이들은 2인 1조 또는 3인 1조 형식으로 한 활동을 할 때가 많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 수사관+시민운동가' 호흡 적적맞아 실족사 '민주화 관련성 없음' 판정

대변하는 사례. 이 사건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던 심씨(당시 24세)가 지난 76년 11월 현 구로동에 '지내야겠다'는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뒤로 행적이 끊긴 사건이다. 심씨는 재학생 유신반대 투쟁을 주도해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까지 받았던 학생운동가.

## 유가족들도 결과에 수긍

조사관들이 정한 두 번째 단서에 관한 이야기는 비극적이기가 하다. 심씨는 당시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동계기근 요원들이 수시로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심씨의 가족들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요한 진술을 해줄만한 이들은 지금 이 땅에 없다.

## 필리기만 하면 끝장이야!



중국, 세계 최고 '사형대국'으로 악명... 세계 최고의 사형대국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1천77명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세계 최고 '사형대국'으로 악명

세계 최고의 사형대국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1천77명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중국, 세계 최고 '사형대국'으로 악명

세계 최고의 사형대국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1천77명을 사형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의문사 규명 나선 현직검사

조남관씨 정보기관 연루사건 담당



현직 검사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이 연루된 의문사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소속 조남관(趙南寬·사시34회·사진) 검사가 주인공. 조 검사는 지난해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에 파견된 이후 조사과장을 맡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옛 정보기관이 연루된 의문사에 대한 재조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다. 특히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수사 경험을 살려 채증 및 복잡한 사실관계 파악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교수 사건 등의 해외 참고인 면담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떠난 조 검사는 92년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을 거쳐 지난해까지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근무하면서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 박홍환기자 stinger@kdaily.com

### 의문사규명위, 군의문사 2건 기각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타살의혹이 있다고 진정접수된 의문사 사건 중 2건에 대해 기각 결정하고 단순사고사로 종결처리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3일 유족들이 군동료들에 의해 91년 타살됐다고 문제제기한 당시 S대생 송모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을 벌인 결과, 민주화 관련성 및 공권력 개입은 물론 타살의혹도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단순사고사로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S대 서어서문학과 2학년 휴학중이던 지난 90년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해 뒤 지난 91년 2월20일 강원도 모 지역 동계 육군기 훈련장 사격지휘차량내 도판받침대 사이에 목이 끼인 채 변사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그러나 군부대 자체조사결과에서도 사고사로 종결처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음에도 헌병대 조사시 당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헌병대 수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88년 군대내에서 타살됐다고 진정접수된 S대생 우모씨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과 부검의 의견,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타살이 아닌 훈련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 軍 의문사 2건

### 단순사고死 결론

### 진상규명위 종결처리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타살의혹이 있다고 진정접수된 의문사 사건 2건에 대해 단순사고사로 종결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유족들이 군 동료들에 의해 1991년 타살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당시 S대생 송모씨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을 벌인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성 및 공권력 개입은 물론 타살의혹도 없다고 최종 결론짓고 이날 단순사고사로 종결처리했다.

걸리잡이



박래군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지금 세계는 테러와 미국의 보복전쟁에 온 신 경이 쏠려 있다.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뉴스면에 오르내리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김준배 사건 중간결과 발표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의문사의 문제가 요동치는 세상사에 의 해 그리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일일까?

1988년 10월 일단의 유가족들이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35일 동안 한겨레를 넘긴 농성과 다시 그

타살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서둘러 자살로 결론짓고 종결하기 바랐다. 한순간에 자살을 잃었던 가족들은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진정을 하고, 농성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다했지만, 늘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 절망의 끝에 유가족은 자살을 기도하고, 자식의 뒤를 쫓은 부모도 있었으니 의문사를 말할 때는 이런 아픔 없이는 거론할 수 없는 일이다.

실종된 노동운동가 박태훈씨의 죽음 경위를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검찰 수뇌부마저 이를 용인하고 있다. 검찰로야 강제수사권도 없는 일개 위원회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기껏해야 1천만원의 과태료나 내고 말겠다는 오만과 배짱을 부릴 만도 하다.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과거에야 안기부며 보안사에 짓눌려 권력의 하수인으로 언명했지만,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최근에 검찰의 수뇌부가 '이윤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언제 검찰총장이 웃을 벅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만능의 무기로 내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다시 한번 기만하는 것이다.

유가족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때 그 죽음의 진실은 무엇이었던지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것을 기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평범한 진리가 되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의문사의 가해 책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그때는 서둘러 그 죽음을 덮어야 했는지, 그 사건의 논쟁 지시자는 누구였는지 낱말이 고해하는 것이 그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범죄행위로부터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여년이 넘도록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자식의 유골을 간직하고 있는 부모가 있음은, 의문사 문제가 봉합될 수도 없고, 묻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언제나 역사는 진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의해 앞으로 나아간다.

진실에 대한 검찰의 의무

로부터 10년 뒤 유가족들의 422일 천막농성 투쟁으로 탄생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고, 비사법적 조사위원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정치적 의문사인 것이고, 그것은 과거 권력의 폭력의 실체를 밝혀 이후에는 권력에 의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인간 생명권의 침해와 그와 관련된 진실 은폐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그 시절에 저수지에서, 바다에서 익사체로 떠오르고, 아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강제 징집된 뒤 머리 형체도 알 수 없는 주검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다. 정황과 실증은 권력기관에 의한

밝혔고, 형송교도소에서 고문 끝에 죽어간 박영우씨,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고문사라는 것, 한총련 투쟁국장 이었던 김준배씨의 죽음에는 경찰의 프락치공작과 투신 뒤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의 일단이다.

그러나 강제수사권도 없는 위원회가 관계기관들의 '형식적인 협조' 속에서 어렵게 밝혀내고 있는 이런 진실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세력에 의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이다. 김준배씨의 사건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위원회의

발행일 : 2001년 9월 29일  
발행인 : 양승규 편집인 : 황인성  
발행처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2F  
연락처 : 3703-5975~7(TEL), 3703-5978(FAX)  
홈페이지 : www.truthfinder.go.kr  
인쇄 : 덕산인쇄(2279-6548)